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인 쇄 2006년 12월 26일

발 행 2006년 12월 26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관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6,5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조민.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12)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380-4 93340 : ₩650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6002854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길	1
II. 동북아 국제질서와 미·중 관계	7
1.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9
2.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2
3. 중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20
III.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31
1.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	33
2. 북한 개혁·개방의 전망 : 시장경제의 태동과 국가의 실패 ..	42
IV. 북한 체제변화 요인 및 유형	49
1. 북한 체제변화 요인	51
2. 북한 체제변화 유형	55
V.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67
1. 통일정책 기본방향	69
2. 통일유형과 추진전략	83
VI. 결론	105
참고문헌	11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5

I

서 론 :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길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 번영의 길이다. 통일은 지난 세기의 분단평화와 분단번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분단 상태의 두 국가체제 아래서 남북한은 각각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주변 강대국에 견인당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1민족 2국가 체제로 남북한의 영구 분단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통일을 향한 토대 구축의 단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주변 강대국의 분리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자주적’ 국가 위상과 역할 정립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통일은 서둘러서도 안 되나 그렇다고 통일을 무작정 기다리면서 역사의 흐름에만 맡길 수도 없는 문제로, 뚜렷하고 장기적인 통일 목표를 설정하여 안으로는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한편, 밖으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60여 년 동안의 ‘섬’으로, 남한은 북쪽으로 차단된 섬이었다면 북한은 극단적 폐쇄체제로 고립된 섬이었다. 그 결과 남북한 각각의 유폐(幽閉)상태로 인한 민족적 기질의 왜소화와 함께 사고의 양극화로 인한 비정상성의 일상화 상태를 겪고 있다.

냉전시대의 역사적 현실은 한반도의 평화가 통일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근대화 시대의 ‘선 건설·후 통일’ 논리거나, ‘선 평화·후 통일’ 논리도 모두 통일을 미래의 남북관계의 자연적 발전의 결과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초 독일 통일을 흥분 속에서 우리에게도 통일 열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 시기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기대되었고, 한편에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동서독 통합의 경험과 예멘 통일의 사례를 방증 자료로 삼아 한반도 통일의 방식과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서 북한의 경제파탄에 따른 극심한 식량난은 수백 만의 아사자와 함께 수십 만의 대량탈북사태를 낳았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붕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동안 통일논의는 어느 면에서 자제되어온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의 구축이 선결 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 속에서 통일 논의는 남북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의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다. 그러나 이제 통일과 평화를 따로 떼어 놓고 접근할 수 없는 상호 불가분적인 관계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 위한 평화, 평화를 위한 통일’의 문제의식 위에서 통일의 주·객관적 조건을 검토하면서 통일에 접근하는 기본방향과 함께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를 예상하면서 통일 추진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통일(Unification)과 통합(Integration)은 구분된다. 통일은 남북한 두 정치체(polity)가 하나의 정치체로 결합되는 국제법적 ‘사건’(event)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통합은 경제, 사회문화, 군사, 정치 그리고 지역, 세대, 계층 등 각 부문 내의 차별성과 이질성을 해소하는 한편 동질성을 높여나가 각 부문 내의 일체성의 추구를 의미한다. 통합 사례로 유럽통합, 지역통합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부문에서의 남북한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통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통일 후에도 각 부문에서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통일은 민족 미래의 삶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분단의 폐해와 민족의 미래 전망 속에서 통일의 의미를 설득함으로써 남측 국민들의 양보와 희생을 기대할 수 있다. 통일은 혼란과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요청하는 매우 힘든 과정이나, 통일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질서 있는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세계사에 기여하는 민족 활로의 개척과 민족사에 대한 확신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II

동북아 국제질서와 미·중 관계

1.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동북아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적 문명의 두 축이 만나 단층선을 형성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문명권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문명권이 각축하는 지역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최강국들의 패권전략이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역내 질서의 불확실한 유동성이 이 지역의 평화와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국가들은 상호 이해에 기반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상호 불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공동의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특별한 개념적 구분 없이 혼용해서 쓰는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범주와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자.

동북아는 우리 사회에 흔히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지리적 범주를 일컫는다. 동북아는 동아시아와 뚜렷이 구별되지 못한 채 서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동북아 시대 또는 동북아 지역 등 ‘동북아’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동북아는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기본 구도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전략적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동북아는 과거 1990년대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으로 환태평양 중심의 접근 방식과 사고 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지정학적 전략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 또는 동북아 시대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적 활로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동북아’ 담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새로

운 국가안보전략과 경제협력 모형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동북아는 지역적 범주 즉, 어느 나라들을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로 포섭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 국가들은 기꺼이 동북아 지역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북아와 동아시아와의 지역적 정체성의 관계도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사용하는 동북아 지역 개념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몽골, 그리고 연해주 러시아를 포함한 지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 대한 이러한 지역 범주가 우리처럼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 군사안보 부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주변 4국의 공통의 이해영역의 지역적 범주에서 동북아(Northeast Asia)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동북아와 동아시아는 지역적 범주와 정체성의 차원에서 서로 다르다. 동북아는 일반적으로 한반도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군사안보적·정치적 관계를 아우르는 지역적 범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국제정치적, 군사안보적 동북아 개념에 경제적 관념을 덧붙여 새로운 동북아 패러다임을 추구해왔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치·군사적 갈등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경제 협력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동북아 중심주의적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혼용해서 쓰고 있으며 양자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중·일 3국은 역사적·문화적 이해방식과 관련하여 동아시아로 불리지만, 정치적·군사안보적 차원에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로 즉, ‘동아시아 3국 = 동북아 국가’로

포섭된다.

대륙문명의 주역인 중국과 해양세력의 고유한 위상을 구축해온 일본, 그리고 근대이후 대륙문명과 해양세력의 상호 각축 속에서 어느 한 쪽으로 견인당하지 않고 독자적 위상을 유지해온 한국과 더불어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세 나라는 분명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은 지난 세기 말부터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을 형성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력과 역내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3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인적 교류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가치의 공유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3국간 정치적 갈등과 긴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통합은 개별 국가 중심적인 근대적 논리와 관행을 뛰어넘어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문명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는 아직 근대적 국가 중심적 경쟁과 대결의 시대를 매몰된 채 평화와 상생을 향한 인류의 문명사적 진전과정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 지역은 정치·군사적 안보 사안과 함께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는 광범하고 새로운 경제 통합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적 협력이 한층 증대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정치·군사적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지역패권주의 행태가 쉽사리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 데에서 이 지역의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미·중 관계 전망 :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미래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미래 전망과 함께 거시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대국은 상당 기간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 속에서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헤게모니 유지 전략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세계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 서로 맞물려 역내 질서의 향방을 규정할 것이다. ‘지역 강자’(regional power)에서 ‘세계적 강자’(global power)로 부상 중인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수호 차원에서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와 함께 미국은 중국을 ‘대등한 협력자’로 인정하는 데에서 미·중 협력의 진정한 출발이 있다. 이처럼 미·중 관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비전 위에서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다자협력 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2.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가.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는 대개 네 부류의 분파가 상호 경쟁적 영향을 미친다. 이들 네 학파는 모두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네 분파는 미국의 영국 식민지 경험과 독립 전쟁 그리고

19세기 이후 문화적, 이념적, 정치적 차이 등으로 인해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각기 다른 노선을 드러냈다. 미국의 역사학자 월터 R. 미드는 이 네 학파로 워싱턴 대통령 밑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역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제퍼슨(Thomas Jefferson), 잭슨(Andrew Jackson), 윌슨(Woodrow Wilson) 등의 네 명의 인물을 대표적 상징으로 삼아 미국 대외정책의 특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¹

첫째, 해밀턴주의로 상징되는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이 상당히 주목된다. 해밀턴은 재무장관 시절 국채액면상환, 주채(州債)의 연방정부 인수, 국립은행의 창설, 보호관세의 설립 등 상공업의 발달을 중시한 재무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후 특히 그의 경제사상은 미국 경제발전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해밀턴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국 기업의 입장을 증진시키는 데서 정부의 최우선적인 사명을 찾는다. 해밀턴주의자는 역사적으로 미국 기업가와 투자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왔으며, 과거 영국의 해상제패 시대에 미국 국익을 위해 어느 학파보다도 신속히 영국의 헤게모니 구축을 수용했다. 이들은 영국과의 협력을 지지했고, 대영제국이 몰락했을 때 미국이 영국의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해밀턴주의는 클레이(Henry Clay), 웹스터(Daniel Webster),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로지 경(Henry Cabot Lodge Sr.), 애치슨(Dean Acheson)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senior George Bush)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제퍼슨주의를 지적할 수 있다. 제퍼슨주의는, 종종 대외정책에

¹ Walter Russell Mead, *Special Providence* (A Century Foundation Book: Alfred A. Knopf New York, 2002), pp. 86~96.

서 개입적인 해밀턴주의와 부딪히는데, 불안정하고 위험한 세계 속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보존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라고 간주해왔다. 제퍼슨주의는 ‘자유의 제국’인 미국이 줄곧 다른 나라에 미국의 가치를 들이밀려는 시도는 미국 독립을 수호하는데 큰 비용이 들뿐 아니라 위험스럽기까지 한 방법으로 여겨왔다. 여기에는 존 아담스(John Quincy Adams), G. 케난(George Kennan) 등을 비롯하여, 역사학자 C. 비어드(Charles Beard)나 문학가이자 정치평론가인 G. 비달(G. Vidal)과 같은 고명한 ‘민주적 고립주의자’(democratic isolationists)들도 포함된다. 제퍼슨 자신의 대외정책은 간혹 제퍼슨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미국의 운명과 자유에 대한 그의 깊은 신념과 균형감으로 다른 어느 학파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셋째, 앤드류 잭슨의 이름은 군사력과 힘으로 상징되는 미국 대외정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잭슨은 미국 제7대 대통령으로서의 개인적 업적이나 대외정책적 측면 보다는 미국의 대중선거제도와 함께 엄청난 대중적 호소력으로 미국 정치를 바꾼 대통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잭슨주의는 미국인들 사이에 아주 깊이 각인되고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명예, 독립, 용기, 여기에다 군인다운 자부심 등을 대표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패튼(George S. Patton) 장군이나 맥아더(MacArthur) 원수는 잭슨주의적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다. 미국 정치에서 잭슨주의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들이 정치적 인물로 얼마나 크게 성공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라고도 하겠다. 미국 역사는 워싱턴, 잭슨, 해리슨(William H. Harrison) 등을 비롯하여 전쟁영웅인 장군들이 마침내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선제공격적 행동과 일방주의적 수단을 선호한

존 퀸시 애덤스, 그리고 비록 장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쟁을 수행한 루즈벨트, 케네디, 부시 등과 같은 대통령들도 거의 전쟁영웅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이처럼 잭슨주의적 태도와 이념은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외교의 이상주의적 노선은 월슨 대통령의 신념과 맞닿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외교정책의 이념을 설파했던 월슨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노선은 그 후에도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흐름의 한 줄기를 이룬다. 월슨주의는 미국은 미국적 가치를 전 세계에 걸쳐 보급해야 하는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물론 미국 대외정책에서 이러한 도덕과 미국적 가치의 구현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이념은 월슨 대통령 이전 시기에도 나타났지만 그 후 그의 이름을 대표적 상징으로 삼는 월슨주의로 부른다. 월슨주의는 경제적 사안을 중시하는 해밀턴주의와는 달리, 세계질서의 법적·도덕적 측면에 더욱 큰 관심을 쏟는다. 월슨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은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가릴 것 없이 모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기본적 가치를 수용하고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월슨주의는 최근의 20세기 이래 나타난 이념이 아니라, 사실 미국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겠다. 미국 외교정책은 세계 도처에 그러한 미국의 가치와 이념을 전파하려는 월슨주의적 소명의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해밀턴주의, 제퍼슨주의, 잭슨주의 그리고 월슨주의 네 분파는 정책제안이나 또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과제 설정 등의 영역에서 미국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발전되어왔다. 지난 세기 초 위의 네 학파는 영국의 쇠락으로 마주친 문제들로 모두 엄혹한 시련을 겪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의 입

장을 재조정할 수 있었다.

우선 해밀턴주의는 대외정책에서 특히, 통상 및 재정정책을 중시한다. 해밀턴주의는 오래 동안 지속되어왔던 보호무역 성향을 억제시키는 한편 미국의 패권 유지에 불가피한 경제정책으로 자유무역을 적극 지지해왔다. 해밀턴주의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패권의 유지·확장을 위해 군사적인 무력에 호소하기보다는 통상정책과 재정금융정책으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의 이익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 특히 해밀턴주의는 지구 위의 어떠한 나라도 미국보다 더 강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² 제퍼슨주의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대외정책과정에서 세계를 관리하는 대국지향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냉전시대에 미국 대외정책의 패권국가적 속성을 내키지 않았지만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윌슨주의는 미국 헤게모니 유지의 뚜렷한 요구 위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도덕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잭슨주의 경우 호전적이고 항상 긴장이 감돌던 냉전시대 40여 년 동안 미국 국민들로부터 아주 광범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나. 패러다임의 전환 : 힘의 논리의 퇴락과 금융재정 논리의 부활

21세기는 어떤 국가도 미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전을 감행한다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세계 속에서 개막되었다.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세계 유일 패권국가의 지위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데에 별로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럼에도 제퍼슨식 공화국의 이념

² *Ibid.*, p. 296.

아래 대외정책에서 절제와 함께 개입의 자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21세기 미국은 스스로 영웅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규정하고 대외정책을 영웅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말하자면 ‘악의 제국’ 소련 공산주의를 물리친 미국은 인류의 도덕적 사명을 완수했고, 그에 따라 그 후 그러한 소명과 가치를 세계 전역에 확산시키고 또한 개입(engagement)을 통해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enlargement)을 숭고한 의무로 여겼다. 1990년대 클린턴 시대에는 다행히 미국적 세계 질서와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도전은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 중이었을 뿐이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세계 리더십 강화를 기치로 내건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³ 부시 대통령의 참모들인 네오콘은 이미 2001년 ‘9·11’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에 도전하는 평양과 북경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이들의 행동을 바로 잡아보려고 했던 데에서 실패 요인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즉, 클린턴 행정부는 공허한 위협과 비효과적인 군사 작전을 외교적 협상과 뒤범벅시켰고, 이들 사악한 정권이 가하는 도덕적, 전략적 도전에 맞서기보다는 미국은 ‘안정’이라는 환상을 쫓아 이들과 타협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표류와 회피를 선택했다. 그들은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책임져야 하는데, 이러한 팽창적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군사비 지출

³ William Kristol and Robert Kagan, “National Interest and Global Responsibility,” Introduction to *Present Dangers: Crisis and Opportunity in American Foreign and Defense*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어윈 스텔처 편저, 황진하 역, 『미국의 힘』 (네모북스, 2005), pp. 93~122.

과 대비태세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전쟁 종료 미국의 대외정책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시기를 헛된 10년으로 규정하고 미국 중심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국무장관 라이스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오랜 과도기간의 처음과 끝으로 인식하였다.⁴ 여기서 21세기 초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예고되었다.

미국 대외정책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시 대통령 제1기 행정부를 장악했던 네오콘은 미국적 이념과 가치의 확산을 소명으로 여기는 월슨주의적 신념의 바탕 위에 군사력과 힘의 과시를 주저하지 않는 잭슨주의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월슨주의와 잭슨주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일방주의의 기초 위에서 억제와 봉쇄를 넘어 선제공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는 세계 곳곳에 성조기를 휘날리며 힘이 곧 정의라는 잭슨주의의 신화가 엿보인다. ‘9·11’을 당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 1기가 월슨주의와 잭슨주의의 결합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부시 2기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기치로 내걸고 적대국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이라크 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국 대외정책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동맹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주의로 부터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중시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의 비용절감 효과와 유효

⁴ Condoleezza Rice,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Walter Wriston Lecture for the Manhattan Institute, October 1, 2002.

성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갈래인 월슨주의와 해밀턴주의는 미국의 세계적 개입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세계주의자(Globalist)로 나설 수밖에 없다. 반면 제퍼슨주의와 잭슨주의의 경우 미국에게 우호적인 세계질서의 창출을 미국의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지는 않는다. 전자가 미국 정치이념과 미국적 가치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힘의 과시를 선호하는 점에서 양자 모두 미국식 ‘민족주의’(nationalist)의 독특한 형태를 띤다.⁵

잭슨주의는 군사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힘의 논리이다. 힘이 없다면 잭슨주의도 약화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2기에 들어와서도 ‘마초’(Macho) 증후군을 보이는 잭슨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력의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딪쳤다. 군사력과 무력의 사용은 항상 엄청난 코스트를 요구한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 침공에 예상치 못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미 3천여 명이 넘는 미군 전사자에 천문학적 액수의 전비를 쏟아 부었지만, 미국에 대한 이라크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정책에서 군사력과 무력적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 평범한 사실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충격과 공포’로 이름붙인 이라크 침공의 군사적 성공의 도취 뒤에 중요한 외교적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기는 어렵다.⁶

⁵ Walter Russell Mead, *Special Providence*, pp. 297~304.

⁶ 존 L. 개디스, 강규형 역,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전략 - 미국의 안보 경험과 그 대응』 (나남출판, 2004), pp. 145~146.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미국의 중동정책은 대개 군사력과 무력에 의존했으며, 결과적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하여 이란의 핵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양식은 강압적 무력중심 논리에서 세계금융질서의 통제와 상대국가에 재정 압박을 가하는 재정·금융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적 거래관계를 끊는 한편, 미국이 지배하는 자본유통과 금융질서의 세계 속에서 축출함으로써 적성 국가의 불법정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외전략은 노골적인 힘을 앞세우는 잭슨주의로부터 불법정권의 국제적 금융 거래를 통제하고 자본유통을 관리하는 해밀턴주의적 재정금융 전략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미국 대외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군사력 중시의 힘의 논리가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다른 한편 금융재정 중심 논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가. 중화민족 부흥과 조화세계 건설

21세기 세계대국을 향한 중국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으며, 총체적 국력도 ‘세계제국의 영광’을 성취할 그날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대국의 목표는 이제 단지 멀리 바라볼 뿐 접근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니다.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나 머잖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로 바뀌었다. 중국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대의 세계대국으로 군림해왔다. 21세기 중국은 세계대국이 될 수 있는 인구와 영토적 조건을 갖추었고, 더욱이 미국과 견줄 만한 세계대국을 향한 의지와 국가전략을 마련했다.⁷

중국의 제3세대 지도자 그룹은 마오쩌둥의 대통합, 덩샤오핑의 발전전략을 토대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기반 위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의 대전략을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다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명확한 길로 접어들어 ‘민족부흥’을 국가목표로 삼아 중국이 세계대국을 향해 매진하는 확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⁸ 이를 위해 중국은 종합국력의 대폭적인 상승을 적극 추구하는 한편, 중국 학자들은 이제 “중국은 세계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 속에서 공공연히 세계대국 불가피론을 제창하고 나섰다.⁹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제4대 지도부는 최근 ‘조화사회’(和諧社會)와 ‘조화세계’(和諧世界)를 대내외적 공식적 통치이념으로 제기하였다. 조화사회 건설은 대내적 통치이념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4년 9월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정책과 개념 즉 ‘균형발전’, ‘공동부유’, ‘조화사회’, ‘조화세계’ 등을 집대성했다. 여기서 중국의 외교 전략의 원칙과 기본 방향으로 제시된 ‘조화세계’ 이념은 중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하

⁷ Yuan-Kang Wang, *China's Grand Strategy And U.S. Primacy: Is China Balancing American Power*, The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July 2006.

⁸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社會主義事業新局面: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개창하자』 (人民出版社, 2002.11), pp. 56~57.

⁹ 예즈칭,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21세기북스, 2005), pp. 100~178.

여 주목을 끈다.

‘조화세계’ 건설, 이는 중국 제4대 지도부의 신외교전략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당대의 주제를 ‘화평과 발전’으로 규정하고 “조화세계 건설은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자 조건”임을 강조했다. ‘조화세계’ 이념은 서로 다른 문명과 다양한 발전 경로를 인정하면서 경쟁과 공존이 함께 하는 국제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중국 정부는 군비경쟁과 전쟁으로 중국의 고속성장을 가로막는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스스로 조화세계의 새로운 외교이념은 중국 외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중국의 변화된 위상을 결합한 중대한 창조적 이론으로 자평하면서, “이는 후 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대 지도부 외교정책의 총결산이자 국제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침”¹⁰이라고 덧붙였다.

‘조화세계’ 이론은 그동안 중국 대외관계의 이념으로 내세웠던 ‘화평굴기’(和平崛起 Peacefully Rising)의 새로운 발전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중국지도부가 이즈음 조화세계를 강조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군사적 힘을 앞세워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방식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조화 이념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미국과 대등한 역할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의 발로라 하겠다. 나아가 후진타오 주석은 외교는 당과 국가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중국 외교의 키워드를 “조화세계 건설, 화평발전 견지, 상호이익을 위한 외교, 국내문제와의 유기적 결합, 인본주의 추구” 등의 5가지로 정리했다.

중국의 ‘조화세계론’은 200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개최 시

¹⁰ “胡 主席 外交講話 ‘世界調和 強調,’” 『新華通信』, 2006년 8월 21일.

기에 처음 제시되었다. 2003년 1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제시한 ‘화평굴기론’이 ‘화평’을 도외시한 채 ‘우뚝 선다’는 ‘굴기’만이 강조되어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오히려 패권주의라는 비난을 받자 조화세계론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화세계론은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 9월 유엔 연설에서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외교이념으로 자리를 굳혔다.

화평굴기는 중국이 2003년 말부터 채택한 외교노선이다. 이는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도광양회’(韜光養晦), 1990년대 장쩌민(江澤民)이 추진한 대국외교에 이어 후진타오가 새롭게 추진하는 외교전략이다. 도광양회는 ‘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굴기’는 ‘산이 우뚝 솟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굴기 외교는 2003년 10월 하이난섬(海南島)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정비젠(鄭必堅) 중앙당교 상무부장이 주장하였다. 그 후 같은 해 12월에 원자바오 총리가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 거론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어 후진타오 주석이 2004년 1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을 순방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외교노선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화평굴기론은 일부 서구 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주창하는 황화론(黃禍論)에 대응해 나왔다. 황화론은 21세기 초 중국의 부상이 20세기 초 저돌적인 독일의 부상을 닮았다는 우려의 반영이다. 화평굴기론은 궁극적으로 20세기 초 독일과 영국의 전쟁이 불가피했듯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심지어 전쟁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의 이데올로그 정비젠이 제출한 이 새로운 개념의 지적 뿌리는 아주 깊다. 이미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요청에 따라 일단의 학자와 함께 서구를 시찰한 후 80년대와 90년대

대부분의 기간 중국 지도자들의 대외 대변인 역할을 떠맡았던 정비젠은 마침내 ‘중국이 평화롭게 우뚝 일어난다’(The Peaceful Rise of China)는 뜻의 ‘화평굴기’를 만천하에 내세웠다.

중국은 이전의 대국외교를 통해 이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성장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 부상’(china rise)을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상태이다. 굴기 외교는 이러한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¹¹ 굴기 외교의 이면에는 미국보다는 유럽을 중시하고, 대국외교의 틀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치에 걸 맞는 행동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주성과 독립성의 의미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면서도 평화와 자주성을 견지하려는 외교 전략임을 호소하기도 한다.¹² 그러나 정비젠이 포린 어페어스지 기고문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중국의 주요 목표는 오로지 화평이라는 수식어 속에서 ‘국력증강’ 하나로 집약될 뿐이다.

<중국의 대미전략 : 도광양회>

덩샤오핑은 1989년~1990년 외교와 안전 부문의 책임자들에게 “냉정히 관찰하고, 진지에 굳건하게 서며, 침착하게 대응하고, 재능을 감추고 숨어서 때를 기다리며, 세태에 영합하지 말고 우직한 채로 만족하고, 절대로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冷靜觀察 穩住陣腳

¹¹ Zheng Bijin, “Peacefully Rising’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Sep/Oct 2005.

¹² Wang Jisi, “Searching for Stability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Sep/Oct 2005.

沈着應付 韜光養晦 善於守拙 絕不當頭)는 24자 잠언(二十四字箴言)을 제시했다. 그 후 그는 “할 일은 해야 한다”(有所作爲)는 4자를 첨부했다.¹³ 중국은 그 후 덩샤오핑의 잠언을 중국의 대외관계의 지침으로 삼으면서 20자 전략방침으로 굳혔다. 즉, “냉정히 관찰하고, 진지에 굳건하게 서며, 침착하게 대응하고, 재능을 감추고 숨어서 때를 기다리며, 할 일은 해야 한다”(冷靜觀察 穩住陣腳 沈着應付 韜光養晦 有所作爲)로 정리했다. 다시 이 잠언은 두 마디로 즉, “재능을 감추고 숨어서 때를 기다리되,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이른바, ‘도광양회/유소작위’로 압축되었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이 두 마디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들은 앞으로 이 전략방침은 100년간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대미(對美)전략은 미국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아직 어깨를 견줄 상태가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에 기반하여 중국외교의 전반적인 수요에 따라 “신뢰증진, 장애해소, 합작발전, 대항자제”(增加信任 減少麻煩 發展合作 不搞對抗)의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즉, 미국과의 신뢰 기반 위에서 직접적인 갈등과 대항을 피하고 합작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미간 무역증대와 투자확대, 미국의 반테러리즘 협력 그리고 무역수지 불균형과 대만독립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을 회피하고 협력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의 대미전략은 도광양회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모습이나, 도광양회는 어느 면에서 보면 사실 상대를 안심케 하고 속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기만술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의 변방전략 특히, 대한반도 전략은 ‘도광양회’가 아닌, 힘을 쓸 때는 써야 한다는 이른바 ‘유소작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¹³ 中國軍力報告: 第二章 解讀中國戰略(2005.7.21) <<http://news.beelink.com.cn/20050721/1890427.shtml>>.

나.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중국의 국가목표는 대개 세 단계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미·일의 해양세력 중심의 세력구도 형성을 저지하는 한편, 중국의 세계대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리고 대만과 통일을 이루고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화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추구한다. 중화주의는 중국과 이웃인 우리에게 위협적인 ‘대국패권주의’로 나타나 보이는 측면을 무시하기 힘들다.¹⁴

전통적으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기미(羈靡)정책을 근간으로 국력이 융성한 때에는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정책을 추진하여 변방을 복속시키는 정책을 취해왔다. 중국의 변방정책은 경제발전과 국력 신장에 기반하여 주변국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유소작위’ 노선이 강조될 것이다. ‘유소작위’는 국제관계에서 참여와 개입을 통해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의 몫을 스스로 챙기면서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유소작위’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예상된다.

최근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유소작위’에 입각한

¹⁴ 김소중, “중국 민족주의의 역사와 전망,”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3), pp. 84~115.

중국 대외정책의 구체적 형태는 두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하나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여정책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중 관계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바로 그것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유소작위’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동북아 지역에서 현 단계 중국의 국제정치적 역할과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은 변방정책의 일환인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 방향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즉, 중국은 대미전략에서 ‘도광양회’로 만면에 미소 띤 얼굴로 미국을 대한다면, 한반도 전략에서는 ‘유소작위’로 적극적인 관여와 노골적인 개입을 천명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중화주의와 변방의 안정>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한 형태인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象系列研究工程)은 2002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국책사업으로,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되었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든다”는 프로젝트다. 고구려사를 비롯하여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북방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국가 차원의 공작으로 역사 절취(竊取)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이 프로젝트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베이징사회과학원(변강역사지리

연구중심)과 동북 3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동북변강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동북방 지역의 사태발전의 추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00억 위안(약 3조원)을 투입하여 특히, 고구려사를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여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 프로젝트에 투입된 엄청난 예산은 학술사업에 일부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방비 예산을 학술사업에 위장편성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식민사관, 황국사관에 의해 자행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비난하면서, 왜 우리와의 우호관계의 훼손을 자초하고 양국 간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패권주의적 작태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을까? 중국 외교부가 최근(2004.4.8)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본 국가개황 중 약사를 뜻하는 간황(簡況)에서 일제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식민사관인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지지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¹⁵ 학술적 프로젝트로 포장된 『동북공정』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방향과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전망과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하겠다. 이를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동북공정』은, 중국은 북한이 완충지역으로 존속되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체제변화 또는 충분히 예상되는 돌발사태의 경우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 영토는 비록 중국 변방사이지만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었던 고구려의 영토로 당연히 중국의

¹⁵ 『연합뉴스』, 2004년 7월 22일.

직접적인 관여·개입사안이 된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자국내 고구려의 유적을 유네스코(UNESCO)에 등재하여 세계를 향해 연고권을 주장하는 전략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구려 유적을 중국사로 학습시키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의 조선족의 동요를 막는 한편 동북 3성 중국인들의 통일한국에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변방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왜곡은 동북 3성 지역의 국민통합을 위해 역사적 자긍심을 부추겨 한족(漢族) 중심의 중화주의로 결집시키려는 데에 목적을 둔 국가 차원의 기만작업인 반면, 한민족에게는 역사침략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이러한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고대사 해석을 둘러싼 단순한 아카데미즘의 영역과는 무관하게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한 관여와 개입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003년 조·중 국경 지역에 15만의 군대를 배치시킨 사실도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상황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면에서 중국은 그들의 대미전략인 ‘도광양회’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는 ‘유소작위’를 통해 패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인류를 기만하는 역사작업을 추진하면서, 대중화주의로 국내적인 민주화, 인권 등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대외적으로 주변국의 역사를 초도화시키고 있다.

III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1.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는 통상 ‘체제내 변화’(within-system change)와 체제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체제간 전환’(between-system change)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전자는 체제가 놓여있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 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체제의 기본 속성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는 체제 유지를 위해 항상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현실 극복을 시도해왔던 역사를 보여준다. 반면, 후자는 체제 유지 기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발생한다. 즉, 체제가 자기 유지에 필요한 조절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붕괴되거나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에 따른 헝가리·체코·폴란드 등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transition) 경우가 이에 부합되는 사례이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를 검정하는 여러 지표를 북한 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¹⁷ 이는 ① 체제이데올로기, ② 통치형태로 북한의 경우 수령-당-국가체제의 내용, ③ 경제체제 즉, 국가계획경제체제의 변화 ④ 국가 억압기구를 통한 대민통제력 등을 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의 내용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렇지 않으면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을 넘어선 변화인가에 따

¹⁶ Charles F. Andrain, *Political Change in the Third World* (Boston: Unwin Hyman, 1988), pp. 1~11.

¹⁷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s.),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3; 서진영,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통일연구원, 1989) 참조.

라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해진다. 여기서는 김정일 시대의 체제이데올로기인 ‘선군사상’과 국가계획경제체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개혁·개방의 내용과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선군사상은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통치이데올로기이다. “당은 언제든지 새로 만들 수 있지만, 군은 한 번 무너지면 두 번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 한다.” 이는 북한 당국자 스스로 선군정치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다. 북한은 “1995년 1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술 초소를 찾으신 날은 이 땅우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역사의 날”이라고 주장한다.¹⁸ 이후 북한은 경제에 대한 총대의 우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탕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선군혁명에 관한 김정일의 정치철학이고 의지임을 내세우고 있다.¹⁹ 이처럼 선군정치·선군사상이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 잡는 김정일 체제에서 정통 사회주의체제의 뼈대인 당, 조선노동당 중심의 통치체제의 복원을 기대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고난의 행군 시 당-국가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국가 명령체계가 거의 해체된 상황에서 체제 복구 과정에 군의 조직적 역량이 확인되었고 군에 대한 김정일의 신뢰와 의존이 강화되면서 차츰 선군정치 논리가 부각되었다고 본다. 그 후 선군정치는 국방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에서도 군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전당, 전 사회적으로 군사적 기풍이 강조되면서 건설도, 농사 일도, 노래도 군대식으로 하자는 ‘인민군대 따라 배우기 운동’이 전개되었다.²⁰ 북한의 선군정치는 1960~1970년대 남한에서도 군을 우선

¹⁸ 『로동신문』, 2000년 11월 18일.

¹⁹ 『평양방송』, 2001년 9월 21일.

시하고 군의 기풍과 조직 원리를 국가의 행정 부문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이식시켰던 시대를 상기시킨다. 당시 남한에서도 군이 국가사회를 선도하는 향도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에 앞선다는 관행적 의미에서 ‘군·관·민’으로 불렸던 시대가 있었다.

가. 붉은기 사상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해체, 중국의 개혁개방, 여기에도 동서독 흡수통일 등 세계적 변화에 따른 충격파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그 후 1994년 김일성 사망이 이은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전 국가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와 신념과 의리를 강조하는 ‘붉은기사상’을 제창하였다. 사실 사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는 공소한 상징에 불과한 붉은기를 앞세워 단합과 노동대열이 흩어지지 않도록 독려하였다. 붉은기 사상은 사상이라기보다는 붉은기를 구심으로 단결과 집단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하나의 상징조작에 불과하다.

나. 강성대국론

1998년 초에 들어와 ‘고난의 행군’을 공식 마감하고 혁명과 건설에 서의 당면목표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 있음을 천명하였다.²¹ 그리고 그 해 8월 김정일의 당 총비서직 공식 취임과 더불어 김정일 체

²⁰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김정일시대를 빛내일 리상국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p. 87.

²¹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행군 앞으로,” 『로동신문』 사설, 1998년 2월 3일.

제의 출범에 즈음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1998년 8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을 내놓았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라고 하면서, “자주, 자립, 자위가 실현되어 그 어떤 지배와 예측도 허용하지 않는 강대한 국가”²²로 사회주의의 용어 대신 새롭고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강성대국론은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거의 동시에 선군정치를 제창하면서 이후 선군사상, 선군시대를 여는 준비 작업을 마쳤다. 그 후 북한은 군을 우대하고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면서 전사회적으로 선군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면서 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의 새로운 핵심논리로 부각시켰다.

북한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국가의 이념이 종교화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정치종교’로, 이는 이념과 신앙이 일치되는 국가종교라고 할 수 있다. 정치종교의 국가 이념은 개인의 생존과 이익은 국가 전체의 생존과 이익과의 일체화로 나타난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수용은 자발성이나 강제성의 산물이나 하는 이분법적 논의는 무의미하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내면화는 자연스런 자발성을 유도하고, 비밀경찰과 폭압적 통제기구에 의한 공포의 강제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반사적으로 무의식적이고 자동인형과 같은 반응을 보여준다. 북한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인민들의 일심단결을 강조한다. 따라서 외부의 억압이 강해질수록 대중동원체제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벌이면서 대내외적으로 결사항전의 초강경 목소리를 한껏 높인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삶에 상당히 익숙해 있으면서도 너무나 힘들어 한다. 핵실험 이후 “총에는 대포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를 외치면서, 이천만이 총폭탄 되어 “일심단결

²² “강성대국,” 『로동신문』 정론, 1998년 8월 22일.

의 위력으로 미제의 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 수령을 결사옹위”를 다짐하는 군민대회²³를 열어 다시 한 번 대중으로 하여금 집단적 마취 상태에 빠지게 했다.

강성대국론은 주체사상의 뿌리 위에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한 이념이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공식적인 지도이념으로,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미래비전, 통치이념이라 할 수 있다.²⁴ 말하자면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치구호의 필요성, 국제사회의 지원과 경제적 의존의 심화, 대령아사 사태를 불러온 엄청난 경제적 대실패에 의한 국가 기능의 마비상태 등은 이미 진부하고 낡은 이데올로기로 생기를 잃은 주체사상만으로 수습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기서 13살에 뉴욕으로 이민간 교포작가 수지 김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기고한 북한 방문기에 나타난 외부인의 눈에 비친 북한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들여다보자.²⁵

2002년 2월 나는 외삼촌을 찾으러 평양에 갔다. 외삼촌을 찾지는 못했으나 노동당 간부들은 여럿 만나보았다.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담당한 위원회의 의장이나 유엔 북한대사는 자신들의 적은 한반도를 갈라놓고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미국이지, 남한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들은 미국은 왜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미국이야말로 핵무기를 양민들에게 떨어뜨리며 온 세상을 전쟁으로 못살게 구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나에게 가장 뚜렷하게 남은 평양의 인상은 그 도시를 짓기 위해서 최소한 한 세대가 몽땅 소멸되었을 거란 인상이었다. 거리는 거의 텅 비었고, 에너지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평양을 보면서 이

²³ “북, 핵실험 성공 환영 평양시 군민대회 진행,” 『중앙방송』, 2006년 10월 21일.

²⁴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새로운 분석』 (통일연구원, 2001), p. 7.

²⁵ 수지 김, “Great Leadership(위대한 영도력),” 『월스트리트 저널』, 2006년 10월 16일.

전에는 이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책이나, 그림이나, 건물들은 위대한 영도자가 만들었거나, 위대한 영도자에 관한 것들이었다. 북한정권에서 찍어내는 유일한 신문인 로동신문은 4쪽으로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대한 영도자를 찬양하는 글들뿐이었다. 정권이 운영하는 텔레비전에서도 언제 찍은지도 모르는 위대한 영도자의 사진만 계속 방영되었다. 어디를 가나, 배경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이것들도 가사를 들으면 모두 위대한 영도자에 관한 노래들뿐이었다. 북한정권은 지난 5천 년간 불교, 샤머니즘, 유교로 이어온 한국 역사를 철저히 지독하게 지워버렸다. 그리고 ‘자주’라는 정치사상으로 만든 “주체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최면에 걸어 놓았다. 위대한 영도자가 역사를 잃어버린 북한주민들의 두뇌를 점령해버렸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의 체계적인 세뇌화 작업과 공포로 수령절대주의 사상에 매몰되어 의식의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나 마취상태가 살아가는 생존방식일 수 있다. 세계와 사회에 대한 합리적 인식의 계기는 거의 차단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완벽한 폐쇄구조는 불가능하듯이 대북 경제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으로 인한 최소한의 접촉이나마 북한 사회의 동요와 함께 외부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강렬한 욕구를 한층 자극하게 된다.

다. 선군사상

주체국가 북한은 이처럼 외부인의 생각과는 아랑곳없이 주체사상의 김정일 시대의 총결산으로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선군사상은 강성대국론의 단순한 이념적 구호를 넘어 그 동안 당에 앞서 군을 중시해온 선군정치 효과의 확인하면서 통치이념의 새로운 체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북한은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봉쇄와 적대시정책을 엄청난 부담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응하는 ‘반미대결전’을 펼치기 위해 전사회적·전국가적 차원의 항시적인 전시동원체제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군을 중심으로 국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김정일 체제의 보위도 가장 효율적이고 조직화된 무력 즉, 군을 중심으로 지탱해야 한다. 이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공고하게 굳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 스스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여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몇 년 동안 군의 특별한 충성 메커니즘을 확인하면서, 그 후 군을 국가운영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로 높여 놓았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군을 특별대우하고 최우선시하는 ‘선군’과 ‘선군정치’는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관행화되어 왔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최근 통치이데올로기로 ‘선군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선군사상은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공화국 창건 55돐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선군사상과 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며 … 공화국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군사상에 기초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 …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사상과 로선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결한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백두의 혁명전통과 정신을 꿋꿋이 이너 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보루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²⁶

다음 해 들어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 강령선포 30주년과 결부시켜

²⁶ “위대한 선군기치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2003년 1월 1일.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하였다.²⁷ 북한이 선군사상을 전체 사회에 일색화하려는 것은 선군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을 전체 사회에 확산시켜 전체 인민을 체제보위를 위한 전사로 만들고 동시에 선군사상의 핵심적 정신인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 사회에 보급하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모든 사업을 군대식으로 추진하며 특히, 물자부족과 식량부족 상태를 ‘항일빨치산 정신’으로 극복할 것을 강요하는 심리적 기제로 활용하였다. 더욱이 선군사상의 핵심은 혁명적 군인정신 또는 백두산 총대정신이며, 이 정신은 수령 결사옹위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한다.²⁸

주체사상은 30여년 이상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모든 인민의 사고와 삶의 준거로 자리 잡아 왔다. 그동안 주체사상이 북한 인민들의 일상 생활세계와 내면적인 의식세계까지 효율적으로 침투되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최근 선군사상을 ‘사상리론적 총화’, ‘근본 리념’,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찬양되는 속에서 김정일 시대 북한 통치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선군사상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상적 대체 작업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즉,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격상된 선군사상의 일색화 작업의 전국적인 추진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후계자 구도와의 연관성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⁹

선군사상은 또한 ‘선군전통’을 내세운다. 이를테면 선군사상이 김정일 당대의 사상이 아니라, 김일성 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²⁷ “선군의 기치높이 정치사상전선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2004년 1월 19일.

²⁸ “선군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적 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자,” 『로동신문』 편집국논설, 2004년 6월 16일.

²⁹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4), pp. 45~47.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선군사상의 역사성과 전통을 강조하는 까닭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사상이론적으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과의 동일한 뿌리를 부각시키려는 데에 있다. 선군전통을 내세움으로써 김정일은 수령과 아버지 에 대한 충성스런 지도자가 되며 인민들에게 영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는 투쟁은 중요하게 선군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만 대를 이어 강력한 혁명대오를 꾸려갈 수 있고 …”³⁰라는 데서 드러나듯이 선군전통은 과거의 전통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한다는 논지에서 김일성-김정일 다음으로 이어지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까지 가족통치체제의 계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상적 작업과는 달리,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의 통치의 독특한 현상으로 당 또는 정부 차원의 국가 기구 내에서 최고통치자인 김정일이 주재하는 공식적인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대부분의 북한 관찰자의 눈에 쉽게 띄지는 못했지만 아주 특이하고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골간인 당, 조선노동당의 뚜렷한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없었고 정부 각 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장군님’ 그리고 대외적으로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 당, 정부 내각 상호 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의구조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당·정 모든 부서와 조직은 ‘김정일 장군님’께 직접 보고하고 지시와 명령을 하달 받는 체계로 굳혀

³⁰ “위대한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 『로동신문』 논설, 2004년 8월 27일.

졌다. 이 구조는 북한 엘리트층 내에서조차 김정일의 대내외적 정책 결정 내용과 심지어 김정일의 움직임의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와 농민이다. 그러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인민대중을 부각시켰다면, 선군사상에 와서 혁명의 주력군은 군대로 대체되었다. 선군시대 북한에서 노동자, 농민은 군을 따라 배워야 하며, 경제적 자원과 국가 경제는 전시 동원체제와 같은 군 우선시정책에서 항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의 근간인 당의 통제아래 있는 당의 군대가 아닌 수령의 군대로, 군이 국가 경제와 대내외 정책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당-국가’ 체제가 아닌 ‘수령-군’ 체제의 북한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당과 정부가 거의 무력화된 상태에서 군의 권력집단화가 불가피해졌지만 군 내부의 다양한 집단 간의 권력관계 즉, 상호 경쟁과 배타적 특권행사 등이 북한체제의 안전과 지속성에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2. 북한 개혁·개방의 전망 : 시장경제의 태동과 국가의 실패

북한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에 대량아사를 가져온 식량난까지 겹쳐 계획경제와 국가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기구의 심각한 기능장애를 초래했다. 국가자원의 만성적·구조적 결핍 상태는 체제유지를 위한 비용 조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국가 전반을 통제하면서 체제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외개방의 우호적 상황이 마련되었으며,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 경제적 지원 등은 북한 사회의 개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그와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로 인한 물자와 대외정보 유입으로 북한 정권이 우려하는 대민통제력의 이완 현상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부의 배급제가 거의 해체된 상태에 주민들 스스로의 자활 방식인 장마당 형태의 농민시장이 나타나고 점차 낮은 수준의 '시장'이 형성·발전되어 가는 추세를 막을 수도 없었다. 북한은 이러한 국면을 2002년 7월에 취한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대응하고자 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된 '7·1 조치'는 북한 당국 스스로 개혁·개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정책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7·1 조치'는 낮은 수준의 시장 형성 등의 '밑으로 부터의' 사회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한 '떠밀린' 개혁 조치로 이해된다. '7·1 조치'는 물가, 임금, 환율 세 측면에서 당시의 거래 현실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생산성의 증대를 기대했으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다. 물가, 임금, 환율의 현실화는 먼저 최소한의 공급 사이드의 조건 충족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7·1 조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행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인플레이와 수요-공급의 부조화로 인한 많은 장애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분출될 수밖에 없었다.

현 단계에 북한의 개혁 조치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개혁 성격은 중국의 개혁 경험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예컨대 정치적 측면에서 '7·1 조치'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의 초기 단계 즉, '부분 개혁' 단계와 비슷한 양태가 드러나 보이지만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가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경험과는 다르다.³¹ 사회 분야에서의 체제변화를 전망한다면,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에 대한 사회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다원화 현상과 당-국가 체제의 약화가 나타났다.

그와 달리 북한에서의 사회변화는 경제발전의 결과가 아닌 오히려 경제실패와 국가 기능의 장기적 침식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 처럼 경제적 성공의 축적이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국가 중앙계획경제의 실패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태동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의 태동이 국가의 해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시장경제의 태동은 북한 정권의 합리적인 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억제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의도와도 어긋나는 밑으로부터 확장되고 있는 ‘불가역적’ 변화라는 점이 북한체제의 미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개혁·개방의 성공여건>

밑으로부터 떠밀린 개혁, 또한 불가역적 변화에 맞닥뜨린 현실에서 성공적인 개혁을 통한 북한체제의 연착륙(Soft Landing)은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에 비취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³¹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해남, 2004), pp. 177~232.

첫째, 왕조적 수령체제의 유지와 성공적인 경제개혁은 병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스탈린적 체제유지의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시장경제 논리를 받아들이는 개혁은 외부정보의 유입과 자유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시장과 자유는 북한의 왕조적 수령체제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개념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외부세계를 잘 알고 있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가장 유능한 지도자로 군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그의 개방 의지가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개혁·개방은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취향을 넘어선 수령체제의 고유한 속성과는 배타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외개방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개방과 단속 즉, 적당한 수준의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시행착오 속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

중국의 성공은 최고 정치지도부의 교체와 함께 당 중심의 개혁지도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에도 적용된다. 북한의 왕조적 수령체제에 자유의 유입과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개혁·개방의 본격적인 결단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변화를 전제한 중국의 개혁·개방을 북한 수령체제가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방의 순간 밀어닥친 자유 분위기를 탱크와 대포로 짓누르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마친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정권의 몰락 사례를 통해 김정일 정권은 이미 충분한 학습효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왕조적 가족지배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정권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단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둘째, 수령의 자의적 통치로부터 법적·제도적 통치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법적·제도적 지배구조가 전사회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탈중앙화와 분권화, 통치기구의 실질적 제도화 진척, 자의적 국가 폭력과 억압적 통치기구의 축소, 일반주민들의 탈집단화와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물론 북한 정권이 이러한 변화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정권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 현 단계 북한에서 사회 하부구조의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정권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법적·제도적 통치구조의 변화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수령체제 자체의 일정한 양보가 전제되어야만 개혁·개방의 전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필수적이다. 즉,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개방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미관계 등 대외환경은 무척 우호적이었다. 중국의 개혁조치는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외 지원을 통해 오히려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동남아시아연합국가(ASEAN) 가입 등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 후 개혁을 단행하였다. 개혁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겪었지만 베트남 정부는 1993년에 이르러서는 경제안정과 함께 근대화와 공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³²

³² 박형중,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 - 북한을 위한 모델?,” 통일문제연구협의회, 『평화를 위한 우리의 한반도 정책 대구상』 (통일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공동학술회)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대외환경은 무척 열악하며 중국이나 베트남 개방 당시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문제는 1990년대 김일성 시대의 개방 시도 단계에서부터 김정일 시대의 지금까지 개혁·개방 과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을 우회한 전방위적 실리외교를 추진한다고 해도 소규모적 경험 이외에 본격적인 개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여건 조성을 구축하기는 어렵다.³³ 대미관계가 개선되어야 서방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시장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미국과의 적대관계의 해소 없이 체제유지를 위한 과도한 군비지출 부담을 극복할 수 없다. 피폐화된 사회간접자본, 에너지와 외환 등 경제적 자원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 기술, 시장 등을 모두 대외개방을 통해 획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핵문제 해결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문제다. 전쟁 이후 6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핵 없는 김정일 정권’의 존립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북한문제의 딜레마가 있다.

의, 2005.7.26~27) 참조.

³³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2005), pp. 489~492.

IV

북한 체제변화 요인 및 유형

1. 북한 체제변화 요인

가. 선군정치와 군·당 갈등

북한 10여 년의 선군정치는 군 권력계층 내부에서의 경쟁과 군과 당·정 간의 갈등이 누적되어 국가체제의 균형이 깨지면서 군 파벌이 형성되고 밀려난 파벌이 정권반대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켄 고스(Ken Gause)는 ‘북한의 민·군 관계: 고비에 선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김 위원장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로 군과 노동당 간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군 지도부 내부에서도 격심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³⁴ 군 지도부와 김정 일 위원장 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와 노동당 간 경쟁은,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가 전격 취소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노동당과 인민군 사이에 새해 예산을 둘러싼 알력 증대의 결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즉, 그는 평시 예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당과 전시예산 체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군 사이의 체제 내 긴장이 무르익어 터진 사례라고 주장했다.

최근 ‘총이나 버터냐’의 논쟁이 나라의 진로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싼 군과 노동당 간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은 큰 관심을 끈다. 군 강경파는 평시예산 체제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하게 6자회담에 복귀해 경제지원을 얻는 대가로 핵능력 개발을 포기하는 협상을 계속해야 하고, 이는 결국 핵무기 포기로 이어지고 선군정치의 종언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데 두려워한다. 군 내부 경쟁과 관련하여, 현재 군

³⁴ Ken E. Gause, *North Korean Civil-Military Trends: Military First Politics To A Point*, September 2006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df/PUB728.pdf>>.

파벌의 존재는 추정 수준이지만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북한군에 대해 5차례의 숙청을 통해 군벌체제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후견제까지 철저히 근절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 최고사령부 요직에 있는 과거 빨치산 세대 군벌들의 동료, 부하, 자식들의 면면을 보면 군 내부 각종 인맥의 파벌화 가능성이 나타난다. 특히 김정일의 핵심 측근들 사이에서 군 파벌이 형성될 수 있다. 김정일에 대한 접근권과 특전·특권을 둘러싸고 군과 보안기관 등 안보관련 무력기관들간 알력(軋轢)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예상가능하다.

북한체제의 취약점으로, 엘리트층의 내부 갈등 가능성은 선군정치 10년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그들 내부에서 전례없는 특권과 접근권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이것이 특권계급 내부의 응집력을 점차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체제는 특권을 부여해 충성을 확보하는 ‘봉건적 귀족체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재화와 은전을 통해 엘리트층을 달랠 능력을 잃으면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 후계투쟁이 북한 내부에서 진행돼오고 있다면 김정일 측근 개인들과 기관들이 특정 후계자들에게 줄섬에 따라, 본래는 이해관계가 같은 지도층 사이에 분파 형성이 조장될 수 있다. 이러한 후계투쟁은 선군정치와 함께 북한체제의 정책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군이 김정일의 후계지명 추진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최고사령부가 교체되고 지휘체제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온 것은 군부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신중한 태도를 말해준다. 김 위원장은 2006년 4월 이전까지 김일성 부자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 노동당 창당일 등을 계기로 집권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대규모 군 인사를 실시, 충성과 1천 200명 이상의 장성급을 승진시켜 군내 영향력을 제고해왔다.

북한 지도부는 수년 내 선군정치가 안고 있는 부정적 요인들에 의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정치와 개혁·개방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북한이 열악한 경제상황을 개선하려면 군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기를 쟁기’로 바꿀 의지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의 정부 예산중 국방비 지출 비중이 지속적인 증대추세에 놓여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노동당이 중심 조직이었으나 김정일 아래선 당이 군으로 대체됐으며, 김정일 유고 상황이 닥치면 당이나 국가기관이 아니라 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 대북제재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엔의 대북제재를 자초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강화될 경우 북한은 외화획득 차단, 경제난 가중, 군수산업의 위축, 북한 군부 분열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 PSI가 이행되면 미사일 등 무기 수출과 불법적인 마약, 위폐거래 차단으로 7억~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벌이가 중단될 것이다. 이 금액은 남북거래를 포함한 북한 전체 외화수입액 20억 달러의 40~50%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와 정권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 수출로 매년 4억~5억 달러, 마약과 위폐 유통으로 3억~5억 달러, 남북교류로 1억6천만 달러 등을 각각 벌어들이는 한편, 재일 동포들의 대북송금액도 연간 3천만~1억 달러로 추산된다.³⁵

PSI 확대 참여와 함께 남북교류 및 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돼 경제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군사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물품 도입이 중단되면 군수산업의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PSI가 이행되면 북한 군부에 위기감이 조성돼 일단 외형적으로 군부의 응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PSI가 이행되면 ‘반미’, ‘반제국주의’, ‘조국수호’ 등의 구호 아래 전 사회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이며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는 군사 외교적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PSI에 동참할 경우 북한 군부는 좌절과 패배감으로 동요하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사치품’을 금수토록 한 배경에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한 데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엘리트층의 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³⁵ 물론 사치품 금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치품 기호 충족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이 금수 조치는 김정일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징벌적인 면을 부각시킨 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충성 유인용 특전적 재화 부족 현상은 자연히 그에 따라 특전·특권 다툼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 군부 내 파벌이 형성되어 소외 파벌의 반정권화 경향을 낳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³⁵ 박창권·김명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북한,” 『국방정책연구』, 2006 봄호 (국방연구원, 2006).

³⁶ 콘돌리자 라이스, 헤리티지 재단 연설 (2006.10.25).

2. 북한 체제변화 유형

가. <시나리오 1> : 대북압박 지속 및 강화

미국은 대북 비타협적 노선을 견지하면서 2차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하여 대북제재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시나리오이다. 대북 압박의 강도를 더해갈 경우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미국의 역반응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동참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명분을 축적해 나간다. 대북 압박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북한에게 적당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파는 6자회담에 회의적이다. 미국이 북핵 선포기를 전제로 6자회담 틀을 활용하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출구를 찾기는 어렵다. 더욱이 북한의 6자회담 참여와 금융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의 미래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은 효율적인 경제제재를 위해 중국과 한국의 대북지원 자제를 요구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해상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시위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와 함께 미국 주도의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가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은 북한을 인내의 한계로 내몰아 신중한 판단과 자제력을 잃도록 만든다. 북한 인권 문제 압력과 탈북자의 반복활동,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불법정권 부각 등을 통해 북한을 계속 몰아 부칠 것이다.

이 시나리오 국면에서 한국 사회는 두 진영으로 쪼개질 수 있다.

‘민족과 동맹’,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북한은 이 틈새를 파고들 것이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반미(민족)와 반북(동맹)’ 사이에서 ‘전쟁이나 평화냐’의 양자택일식 싸움판이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국가의 미래는 한층 불투명진다.

나. <시나리오 2> : 북한 체제변화 추구 <정권교체>

북한은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커다란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다. 평양은 이미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핵보유국 북한과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협상을 추진하는 것보다 평양의 정권교체를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권교체 자체의 정당성 차원이 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기기가 지극히 어려우며 또한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정권교체(Regime change)는 특정 국가의 공격적이고 비우호적인 정권을 제거하고 유화적이고 순응적인 정권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의 경우 핵보유를 추구하지 않거나 또는 덜 위협적인 정권으로의 대체(Regime replacement)를 생각할 수 있다.

정권교체는 부시 행정부의 발명품이 아니며, 결코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의 새로운 대외정책도 아니다. 과거 소련과 나치 독일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인접국을 대상으로 종종 활용했던 정책이다.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과 일본의 정권교체를 단행했다. 정권교체 방식은 역사적으로 세 측면에서 발견된다. 첫째, 제국주의 시대에 강압과 무력을 동원하여 식민지 통치 구조

를 제국주의 국가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형태로, 정권교체를 통해 식민지 통치엘리트층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통치의 대리인으로 만든다. 이러한 정권교체 유형은 지난 세기 일제에 의한 을사보호조약 강제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친일정부 수립과 교체 사례를 비롯하여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에 대한 통치유형의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둘째, 패전국의 경우 전승국의 구상에 따라 대상 국가가 덜 호전적이며 전쟁 수행 능력이 통제될 수 있는 전승국의 간접통치를 수용하는 통치구조로 전면 교체된다. 전후 미국에 의해 패전국 독일과 일본의 경우 미국의 지배전략에 순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다. 미국은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폐허 위에 자유민주주의의 이식과 함께 경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독일과 일본으로 하여금 서방 세계의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었다.

셋째,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에 의한 각각의 진영 내 국가들의 정권 교체의 형태가 빈번히 나타났다. 소련의 무력 개입에 의한 폴란드, 헝가리 등 사회주의 국가의 정권교체가 있었으며 소련의 판단에 따라 친소적 정권이 수립되었고 또한 교체당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정에서 꼭두각시와 같은 친미정권을 수차례 교체하기도 했고 특히, 합법적 선거에 의해 수립된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를 통해 피노체트 군부정권으로 교체시키기도 했다. 그 후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술한 정권이 수립되고 교체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정권교체는 미국이 사주한 음모, 쿠데타, 군사력 동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정권교체 시나리오는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질 수 있다. 체제전환은 현실적인 가능성의 문제 못지않게 북한 사회의 '빅뱅'을 초래

하는 폭발성을 지닌다. 그런즉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의 폭과 심도를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의 영역에 포섭되지 못했다. 대개 체제전환은 북한의 붕괴를 가져와 군사적 충돌, 핵 물질 및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량 탈북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핵·미사일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정권 차원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정권변환'(Regime transformation) 이나, 또는 통치방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리더십 변화'(Leadership change) 등이 이론적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하여 '정권행태의 변화'(change in Regime Behavior)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다.

최근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워싱턴과 베이징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금기시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분명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모종의 변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하며, 무척 주목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미국 조야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논의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분명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힐 차관보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중국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북·중 관계의 변화계기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중국 측에 한반도 현상 타파 시 미국이 전략적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미 의회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7.20)한 힐 차관보는 미국

의 대중관계에 대해 증언하면서 베이징에서 중국과 나눈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막후 대화의 일단을 소개했다. 핵심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관계의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미국이 어떤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계속 중국 측에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북·중 관계가 틀어지거나 북한체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안보적 관점에서 우려하는 바를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중국 측에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³⁷

<미국과 중국의 빅딜>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이익의 존중을 전제로 북한문제에 대한 ‘빅딜’을 단행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위폐 등 불법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의 북한 관리를 받아들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대량난민 유입을 초래할 북한 붕괴를 가장 우려한다. 그러나 미국 입장으로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보다 대량살상무기(WMD)가 훨씬 우려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입장에 동의하지만, 북한체제 자체가 중국의 끝없는 불안 요인이라면 미국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는 논리다.

미국은 북한 지역을 미국의 영향권아래 두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책을 실현하기 힘들다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차

³⁷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Witnesses: Panel 1 The Honorable Christopher 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North Korea: U.S. Policy Options* (Thursday July 20, 2006). <<http://foreign.senate.gov/hearings/2006/hr060720a.html>> (검색일: 2006.7.23).

선택은 ‘핵 없는 북한’이다. 즉, 체제유지를 위한 핵이 필요 없는 북한은 오직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정치적 야심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킨다면 중국의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배타적 특권을 인정하겠다는 차선택으로 기울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존재 가치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며, 상징적 수준의 소규모 주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³⁸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빅딜 개연성은 결코 가공의 소설 소재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미국 조야에서 들려오는 미국과 중국의 빅딜 발상 자체는 우리에게 지난 세기의 역사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이 시나리오에서 ‘자주 국가’ 한국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

다. <시나리오 3> : 북한 정권진화(Regime Evolution) 추진

정권진화(Regime evolution)는 군사력 동원을 자제하고 외교적 노력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대상 국가의 호전적인 행태를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미국은 냉전시대 소련에 대해 봉쇄정책을 취했는데, 봉쇄정책은 단순히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력과 팽창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봉쇄정책은 정권진화를 의도하는 측면도 있다. 봉쇄정책을 기획했던 조지 캐넌도 “미국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소련의 붕괴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진화는 대

³⁸ Richard Holloran, “Phasing Out US Forces in South Korea” (July 28, 2006), <<http://www.realclearpolitics.com/articles/2006/07/>> (검색일: 2006.7.30).

상 국가를 고립시킨 뒤 외교적 노력을 배제한 채 직접적인 군사력을 동원하는 정권교체와는 다르다. 이러한 정권진화는 군사력보다 외교를 앞세우며 주고 받기식의 점진적인 접근을 선호한다.³⁹ 1990년대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군축협상과 함께 교역 확대를 추진한 것은 대표적인 정권진화 정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regime change)는 정권축출(regime ouster)과 그 다음 단계의 정권대체(regime replacement)까지 포괄하는 과정이다. 정권축출도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다음 단계인 정권대체는 더욱 성공하기 어려운 문제다. 소련의 경우 70년 넘게 정권을 유지했으며 쿠바의 카스트로는 아직도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이라크 정권교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의 축출보다 새로운 정권의 수립이야말로 한층 어려운 작업이며, 미국은 후세인 정권축출보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이라크 수령에 빠져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국면에 처했다. 군사적 점령정책은 용이하지 않고 민족주의의 발흥과 조직적인 저항 등은 아주 높은 인적, 군사적,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

<북한과 정권진화>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붕괴론이 부각되었으나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굳건하다. 미국의 대북 군사력 사용은 이라크의 경우와는 달리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일본조차 지지하지 않을 수

³⁹ Richard N. Haass, "Regime Change and Its Limits,"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5.

있다. 미국의 북한 침공은 제2의 한국전을 불러 일으켜 엄청난 희생과 피해가 예상된다.

북한의 정권교체 문제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 북한의 붕괴는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해외 유출 등 가공할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권교체나 붕괴에 따른 혼란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공백 상태에서 대중폭동, 집단기아, 대량탈주 등과 같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제한다면 현실적인 북한 정권의 진화정책의 추구가 바람직하다.

정권진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시나리오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외부의 개입에 의한 북한의 체제변화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또한 세계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⁴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다. 정권진화는 군사력보다 외교를 앞세워 ‘주고받기 식’의 점진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이는 문제 국가를 고립시켜 직접적인 군사력을 동원하는 정권교체와는 다르다. 정권교체는 대상 정권을 축출한 뒤 대체정권을 수립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라크에서 보듯 엄청난 정권대체 비용을 치르면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 북한정권의 진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정권진화 논리는 미국이 한국·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에너지를

⁴⁰ Joseph S. Nye JR., “Transformation is Hard,” *Time*, July 9, 2006.

포함한 경제협력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북한의 핵동결과 핵폐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정권진화 전략은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체제가 존속되는 한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나리오는 ‘희망적 전망’(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지적도 제기된다. 어느 면에서 보면 <시나리오 3>인 정권진화 논리는 오히려 <시나리오 2>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데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미국과 한국 사이에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해의 일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무의미한 시나리오로 전락된다. 현재 한·미 관계의 이완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권진화 시나리오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론적으로 보아, 북한문제 해결의 시나리오 진행의 전망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⁴¹ 즉,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나리오 1>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비공개적 차원에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시나리오 2>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시나리오 2>가 가까운 시간 내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대담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대대적인 개방 드라이브로 극적인 국면 전환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잠정적으로 대

⁴¹ 조민, “북한 미사일 사태와 한반도 평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년 가을) 참조.

북압박 조치를 유예한다면 북한문제의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점차 공식적·비공식적 수준에서 체제전환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제 접근 방식은 앞으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초입 단계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나리오 3>은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 국면이 자리 잡는 상황을 상정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비로소 한반도 위기의 해소와 평화 정착의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강경론자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대북정책의 공세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로 북한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고, 일본은 유엔결의안을 일본 외교의 성과이자 승리로 자축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반면 북한의 안보동맹국인 중국과 우방 러시아도 유엔 제재결의에 동참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향후 대북정책도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금융 수단과 확산방지구상(PSI)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문제’는 미국의 중동 전략과 연계되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직후 중동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마치 세계 뉴스의 초점에서 사라진듯 하지만 그 사이에도 미국의 대북 압력 조치는 차츰 구체화되고 있었다.

레비 차관은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최소한 취해야 할 조치로, 대량살상무기(WMD) 연루 기업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 11개에 대한 자산동결과 거래 금지를 요청했다. 더욱이 미국 대외정책의 모든 관심이 중동지역에 쏠려있던 상황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

적인 ‘도둑정치’ 분쇄 전략을 선언하고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이 그 주된 대상의 하나임을 밝혔다.⁴² 이는 북한과 같은 독재 권력층의 부정 부패 행위와 독재자의 통치자금의 해외유출·은닉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말하자면 독재자와 독재정부가 ‘국민의 돈’을 강탈하여 불법 활동이나 대량살상무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고 하겠다.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수준을 넘어 북한정권의 ‘행태변화’(behavioral change)를 끌어내겠다는 미국의 압박 전략과 북한의 대응 사이에서 중간 지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향후의 상황전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 역풍에 처한 북한이 수습 국면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발하여 전면 도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⁴² George W. Bush, “President’s Statement on Kleptocracy,”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8/20060810.html>> (검색일: 2006.8.12), “Fact Sheet: National Strategy to Internationalize Efforts Against Kleptocracy,”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8/20060810-1.html>> (검색일: 2006.8.12).

V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 통일정책 기본방향

가. 민족정통성 재확립

통일은 우리에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상태를 말한다. 일제의 패망에 따른 해방과 함께 남북한 각각의 분단국가의 수립 시기를 거쳐 전쟁과 남북한 분단구조가 고착화된 냉전시대, 그리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작금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은 서로 한민족 전체의 대표성을 주장해왔다. 즉, 건국과 경제적 성공 그리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강조하면서 민족사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자처했다. 이는 민족사적 정통의 문제에서부터 스스로 미래 통일국가의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면서 이른바 정통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더욱이 바로 이 정통성을 준거로 남한과 북한 어느 한편을 선택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그런즉 통일 문제에 대해 접근은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 간 정통성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정통성(正統性 Legitimacy)은 일반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에서 정치체제 또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통치권력의 정당성과 함께 국가 구성원의 통치 권력에 대한 복종 의무에 대한 도덕성의 근원이다. M. 베버는 정통성의 근거를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의 세 이념형으로 나누었으며, 합법적 지배 유형의 틀 내에서 근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근대국가의 합법적 지배 유형이 일반화된 서구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정통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제2차 대전 후 정통성 문제는 1970년대 말 서구화와 접맥된 근대화론이 팽배했던 시기에 정통성(Legitimacy)과 효율성(Effectiveness)간의 갈등 관계를 제3세계의 식민지·종속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정통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즉, 제3세계에서의 정통성은 선거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합법적 절차(legitimate, lawful)에 의해 수립된 정부와 그렇지 못한 정부, 즉 비합법적(illegitimate)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군부·혁명정권과의 통치의 정당성 문제로 정통성 시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경우 대개 합법정부의 무능, 부패, 국정실패 등 근대화 과제의 수행 실패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군부·혁명세력이 권력을 탈취함으로써 ‘정통성(합법성)’이나, 근대화 과제 수행능력의 ‘효율성’이나 하는 문제로 정치적 논쟁의 장이 펼쳐졌다. 말하자면, 정통성 대 효율성의 갈등적 선택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통성 문제는 제3세계의 공통적인 식민지·종속국가의 경험과 함께 특히, 분단구조에서 야기된 정통성 문제의 중첩적 성격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문제는 대한민국의 재발견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초기 정통성 문제는 해방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주체세력의 성격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다. 그 후 1민족 2국가 체제인 남북한 분단구조 아래서 한민족 즉, 한반도 전체 주민의 유일 합법정부의 인정을 둘러싼 정통성 대결은 불가피한 문제였고 지금까지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정통성 문제의 소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는 두 차원에서 나타났다. 첫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냉전시대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전제에서 건국세력의 성격을 둘러싼 정통성 논의가 제기되었다. 건국과 정부수립 과정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주의 계열의 배제 속에서 국가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친일반민족세력의 재부상과 반공친미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 장악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차원에서 정통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둘째, 남북한 이념과

체제 대결과정에서 상호배타적인 정통성을 주장했다. 북한은 건국주체인 항일민족해방운동 세력과 친일청산으로 민족사의 정통을 내세웠고 남한은 반공이념으로 체제 정통성을 방어하고자 했다. 남한 사회 내부에서나 남북한 관계에서나 정통성 문제의 키워드는 건국주체와 통치세력의 성격으로 즉, 항일독립운동 세력이나 반민족 친일세력이나 하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정통성과 원죄의식>

남북한 모두 미국과 소련 외세에 의한 외삽(外插)국가로 국가 수립 과정의 비자주성에도 불구하고 항일민족해방운동은 건국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거의 유일한 척도로 인식되었다. 항일독립운동세력의 배제·결락과 친일청산의 실패는 한국 사회의 ‘원죄 의식’으로 각인되었으며, 이 점은 항상 대한민국 정통성 문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원죄의식으로부터 상대적 해방을 누려왔다. 통일한국은 정통성 확립을 통해 원죄의식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1세기 민족국가의 정통성은 역사적 맥락, 정치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세계사 속의 미래전망 등과의 관련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통성 문제의 판별 기준으로 건국세력의 성격, 민주주의, 체제역량의 세 차원이 포섭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건국세력의 성격은 이미 ‘역사적’ 현실로 일단락되었으나, 통일 과정에서 민족사의 새로운 정통 노선의 회복을 과제로 삼아야 하며, 민족사의 정통 노선과 지향성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건국세력의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인권 등 사회정의 및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치체제의 정당성의 문제로 평가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에서 자유, 인권 이념은 이미 박제화된 개념에 불과하다. 자유의 가치가 박탈된 북한 사회에서는 평등 이념조차도 빈곤의 평등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깊고 광범한 회의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셋째, 체제역량의 문제를 정통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1세기 민족사를 담지(擔持)할 수 있는 역량과 세계사 속의 한민족의 미래전망의 문제로, 남북한의 국력차이, 실패한 체제 북한, 그리고 닫힌 미래와 열린 미래의 시각도 중요하다.

이처럼 정통성의 세 지표를 준거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대변할 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분명해진다. 남북한 정통성 문제는 ‘과거’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존재이유 그리고 민족사의 담지역량 등 다층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1민족 2국가 체제에서 민족사의 담지자로서 대한민국의 의의를 재발견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7천만과 해외동포 700만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 또는 조선의 선택에 대한 물음도 남북한 정통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귀속의사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승자의 논리는 역사적 ‘현실’이나, 정치적 승리와 권력 장악 그 자체가 국가 정통성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건국과 정부수립 과정에서 이승만과 친일반민족세력의 정치권력 장악과 사회적 헤게모니는

역사적 현실이나, 그 ‘현실’은 지금까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인정 거부는 분단시대의 정치적 ‘현실’로 강력한 힘 즉, 저항력을 발휘해 왔다. 따라서 해방과 건국을 둘러싼 제정치세력의 재평가 작업은 정통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역사적 성찰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족 구성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 차원에서 보면, 민족사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

사회주의 좌익계열의 항일독립운동과 건국의 정통성 문제는 긍정적으로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1920년대 중반 이래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주류인 사회주의 계열은 남북한 역사에서 모두 잊혀진 존재였다. 남한은 지금까지 우익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항일운동만을 인정해왔으며,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여타 사회주의 항일운동세력(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을 숙청하고 역사에서 말살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주의 좌익계열의 항일운동의 실체는 상당히 밝혀진 상태다. 그와 더불어 임시정부는 다양한 항일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통으로 규정하는 입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두 개의 분단국가 수립과정에서 북한체제를 ‘선택한’ 사회주의 좌익세력을 민족사의 정통성 차원에서 포함하는 문제는 통일 이후의 과제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남한 체제 내에서 국가건설과 정부수립 과정에 기여한 좌파 민족주의 세력도 대한민국의 정당한 역사 주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통성의 재인식 : 과거와 미래의 화해>

정치적 승리, 또는 결과론적 성과가 정치적 행위와 선택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반민족 친일세력의 반공연합 전선에 의해 국가적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박정희 군부독재세력에 의해 근대화 과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근대국가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여기서 이승만 반공국가의 구축에 의한 국가체제 확립, 그리고 박정희 근대화 과업의 성공을 국가정통성의 핵심적 내용으로 주장하는 논리가 제기되는 분위기가 있다. 정통성은 궁극적으로 국가사회를 이끌어갈 규범적 가치와 실천적 역량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건국과 국가건설 과정에서 주도권과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측은 외세영합적 친일반공세력으로 그들은 북한과의 체제대결에서 국가 정통성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럼에도 국가체제의 확립과 근대화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전혀 무시·부정하는 인식은 현실성을 결여할 소지가 크다. 한민족은 미·소 초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와 냉전체제의 최대의 피해자이나, 대한민국의 성공은 냉전체제의 수혜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절반의 성공’은 주체적 역량의 산물이기도 하나, 중심부 국가 특히, 미국의 ‘초청에 의한 상승’(promotion by invitation)의 혜택으로도 이해된다.

왈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적 시각에 따르면, 주변부국가는 ‘기회포착전략’,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 및 ‘자립전략’의 3가지 전략에 의해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내의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상승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로 꼽힌다.⁴³ 기회포착전략은 세계경제의 수축 시 수입대체산업을 채

택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국가들에 해당한다. 이 국가들은 1930년대 공황으로 중남미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압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수입대체산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중주의적 민족주의의 등장을 보게 되었다. 이와 달리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팽창기에 중심부 자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그들의 초청에 의해 지위상승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신국제분업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 국제자본은 노동비용이 싼 지역인 주변부에 원료와 중간재를 공급하여 조립한 후 다시 중심부로 수입하는 형태의 국제분업질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신국제분업질서의 출현으로 국제자본과 주변부와의 협력에 의해서 세계시장을 위한 상품생산이 주변부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한국, 대만 등이 후보지로 선택되어 국가와 국제자본과의 연계에 의해 산업화를 추진한 전략을 말한다. 이와 달리 북한, 쿠바, 탄자니아 등은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자력갱생의 길을 모색했다. 그런데 민중주의적 민족주의 전략과 자력갱생전략을 택하는 경우 반제국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민중동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재’의 인정이 곧 대한민국 정통성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건국과 국가건설 과정에서 민족적·민주적 세력의 배제·좌절로 한국현대사가 실패로 종결된 역사가 아니라, 미완의 과제로 현재적 가치로 계승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은 여운형과 조봉암의 경우와 같은 민

⁴³ Immanuel Wallestein, *Dependence in an Interdependent World: The Limited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with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N.Y., Cambridge Univ. Press, 1979).

족적·민주적 좌파세력의 포용과 정당한 평가 속에서 가능하며, 압제·억압의 과거를 포용하고 통합의 미래와의 화해를 통해 민족사의 정통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화해와 화합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과거사의 청산 없이는 공허한 논리에 불과하다. 특히 친일문제의 청산은 통일한국의 정통성 확립의 전제가 아닐 수 없다.

정통성 문제와 관련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한 보다 신중한 이해가 요구된다. 우선 개발독재의 모델로, 한국을 궁핍으로부터 해방시킨 박정희 산업화 전략과 수행능력을 하나의 보편적인 모델로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한국현대사의 중심적 과제는 근대국가의 건설, 자본주의적 경로를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세 과제였다. 물론 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은 국가 정통성의 기반이 된다. 이 가운데 근대국가의 건설은 제도적 차원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과제였다면, 산업화는 박정희 정권의 과제였으며, 민주화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나타났다. 근대화는 1960년대 국제환경과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이 아니었더라도, 어떤 정부라도 그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성립되나, 그러한 가정의 의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박정희의 실존적 존재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는 군사주의와 당대의 시대정신이었던 발전주의를 결합시켰으며 군사주의를 독재의 수단으로만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했다.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엘리트층의 근대화 충동과 대중의 근대화를 향한 열정적 집합의지(élan)를 결합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4·19 민주당 정권도 근대화 과제 앞에서 박정희 노선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그 시기 누구나 ‘박정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회의적이다. 그러나 근대화 과제 수행이

라는 개발연대의 목적정당성에 매몰됨으로써 수단의 비합리성 즉, 독재와 정치적 폭력이 과소평가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는 결과가 말해준다는 논리에서, 정의와 합법적 과정을 중시하는 논리는 냉소의 대상으로 폄하되면서 다시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강자·승자의 입장이 득세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박정희 예찬론의 함정이며, 한국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퇴역적 논리로 전락하게 될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박정희 정권은 성공의 결과로 몰락을 자초했지만, 독재체제의 극복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고, 산업화의 길은 그늘 또한 상당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던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다. 개발독재 시대에 반독재와 자유민주주의의 온전한 구현의 상징적 구심이었던 장준하의 경우 박정희 모델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대안적 존재가치로서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었다. 박정희와 대립되는 출신배경은 즉, 관동군 대 광복군은 박정희 정치권력의 콤플렉스 근거로 작동하면서 유신체제하 민주화의 구심이 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해방 직후 친일파의 헤게모니 하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남한 사회의 원죄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인색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세력의 지배와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항한 4·19 혁명, 반독재 민주화운동,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등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기나긴 항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는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 민주화 세력은 개발독재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산업화 세력에 대해 줄기차게 도전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의 파행성을 민주화를 통해 바로잡고 보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정통성 또는 정

당성의 문제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초기 미군정 시대의 친일 문제는 그 후 한국 현대사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했다. 친일 문제는 일찍이 청산되어야 했다. 바로 이 미해결의 역사적 과제가 1980년대 민주화 시대를 여는 문제의식으로 되살아났다.⁴⁴ 그 후 민주화 시대 해방 전후사에 대한 인식은 세계 냉전을 미국의 책임으로 비난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의 세례 속에서 이 시기의 역사적 과정의 기본적 대립축을 한국민중 대 미국과의 대결로 규정하는 시각이 유행하면서 한국현대사 인식의 편향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⁴⁵ 그러나 해방과 함께 시작된 남북한 체제경쟁 속에서 친일세력을 자신들의 동조세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분단국가 수립기에 남한에 비해 역사적 정통성 측면에서 우위에 섰다. 지금은 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졌지만 국내외에서 식민지시대 일제에 투항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싸웠던 다양한 투쟁세력이 북한정권의 참여세력이었다.⁴⁶ 이런 점에서 북한이 건국의 정통성 측면에서는 남한보다 앞선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통성 문제는 건국 주체의 성격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국 후 남한에서는 부당한 정권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민주화를 이루었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 정권이 선출되는 민주국가의 이념과

⁴⁴ 송건호,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 오익환, “반민특위 활동과 와해”; 임종국, “일제하 친일군상의 실태,”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⁴⁵ ‘민중항쟁·무장투쟁·문화예술운동·한국전쟁의 해명’의 부제를 부친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참조.

⁴⁶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이외의 다양한 항일세력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워왔다. 1980년대 주체사관이 확립된 이후로 북한의 역사는 김일성 개인과 그의 가족사 중심으로 서술된다. 1937년 무렵 김일성을 비롯하여 만주 지역에서 일제와 싸운 중국인과 조선인들의 연합군인 동북항일련군의 무장대오는 11개 군 4만 4천여명에 달했다. 황룡국 외, 『조선족혁명투쟁사』 (료녕민족출판사, 1988), p. 418.

제도가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권의 정당성 문제는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건국 초기 민중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와 인민생활 영역에서 국가의 참담한 실패, 그리고 세습적인 가족정권의 폭압적 독재가 지속되면서 정권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영역에서의 총체적 부패와 억압적 통치로 이제 아무도 북한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인민적 지지와 동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강제적 폭력과 통제로만 유지되고 있는 지구 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이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성공한 국가’라는 전제에서 과거사 자체가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승자의 역사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면 사회정의, 도덕적 삶의 가치는 무의미하고 냉소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과 등과 대결하면서 서로 증오하고 극렬하게 싸웠지만 결국 서로 양보와 최소한의 타협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어왔다.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성취함으로써 세계의 놀람과 부러움을 사면서 우리의 경험과 미래를 세계 인류와 함께 해야 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정통성과 ‘반외세 自主’>

‘반외세 자주의식’은 한민족의 집단적 의식세계 속에 깊이 각인된 유전인자적 속성을 지니면서 한민족의 독자성·정체성을 유지해온 정신적 지주였다. 한민족은 신라 건국 이래 1910년까지 920여회의 외침을 당했다. 근대적 세계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반외세’는 전통적

지배계층인 봉건유생과 외세침탈의 직접적 피해자인 민중과의 의병 운동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던 매개 고리였다. 이 시기 개화파는 외세를 객관적으로, 주어진 실체로 인식하면서 외세(일본)를 근대개혁의 방조세력으로 삼고자 했으나 전통적 외세(청국)의 무력간섭으로 근대개혁은 좌절되고 말았으며, 그 후 대세순응적 개화파는 외세영합적 세력으로 전락하면서 반외세 자주의 계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봉건유생의 ‘위정척사론’은 서구 근대물질문명(邪)의 배척과 시대착오적인 소중화(小中華)의식에도 불구하고, 반중화(反中華) 반외세의 이념으로 기능했으며 민중의 반외세 의식은 국권상실기 근대적 자주의식으로 발현되었다. 그 결과 한국 근대사의 역정 속에서 굴절된 ‘반외세 자주’의 문제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국가 행위의 정통성의 준거이자,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덕목으로까지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에서 근대국가의 ‘자주’의 문제는 거의 사어가 되다시피 한 용어이나,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는 외세에 의한 분단과 자주의식을 계속 반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1980년대 신군부 세력의 등장 배경과 관련한 미국 역할에 대한 의혹, 여기에다 북한의 ‘반미 자주화’ 주장은 군부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 있는 논리로 제시되었다. 그 후 주한미군과의 지속적인 마찰은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민족적 자긍심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반미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인의 생래적 의식인 ‘자주’ 관념을 한층 자극시켰다.

외세에 의해 굴절된 수난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인에게 반외세 자주는 규범적 가치이자, 대중적 감동에 호소할 수 있는 언술이었다. 그러나 자주는 ‘문화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으나, 국제정치의 현실적 인식에 기반한 개념으로 정립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

한의 ‘반외세 자주’는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체제 몰락을 자초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현대사를 외세추종세력이 주도한 역사, 굴종의 역사로 보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 땅 위에서 민족해방과 잘사는 민주국가를 위해 온 몸을 다 바쳐온 선배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표할 줄 아는 긍정적 전통의 확립이 기대되며, 한국의 ‘어제’에 대한 긍정과, ‘오늘’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나. 남북한 평화경제체제 구축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남북한 평화경제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와 경제의 상호 내재적 융합 상태로, “경제가 평화의 토대이자, 평화가 경제의 바탕이 되는 평화경제의 제도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가 제도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사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과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과정의 상호연계 속에서 추진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규범 및 질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평화는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상태이며, 경제는 남북한 공동번영의 추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번영 정책의 이론적 틀과 비전 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법론적·실천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목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의 제도화’를

⁴⁷ 조민,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구축하는 데 있으며, 평화경제체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함과 동시에 평화와 경제의 상호작용 또는 상승작용의 제도화 상태를 추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의 선순환적 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확립을 통해 “번영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prosperity)와 “평화를 통한 번영”(prosperity through peace)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한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남북관계, 동북아 공동번영, 그리고 국내질서의 변화와 직·간접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평화경제체제의 구축·확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 차원에서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남북 교류협력을 한층 가속화시켜 ‘사실상의’ *de facto* 통일 상태를 한 단계 앞당기게 된다. 둘째, 동북아 차원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 간 다자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기본인식을 공유할 것이며, 평화경제체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은 관련국 사이의 쌍무관계 및 다자협력관계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차원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해소하는 한편, 평화통일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족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와 함께 북한개발협력을 평화통일 추구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2. 통일유형과 추진전략

통일은 북한변화,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복합적인 상황 예측과 관리를 통해 남북한 급격한 통합을 통제하면서 전반적인 통합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단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 전략은 배제한다. 통일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전격적인 형태로 남한이 통일을 떠맡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통일 로드맵은 대략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평화적 흡수통일 유도과 합의형을 중심으로 보면, 일국체제 통일방안은 시장경제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길이다. 그와 달리 북합국가 통합방안은 남북 연합제와 연방제로 나뉘볼 수 있는데 어느 경우나 통일의 과정에서 압축적인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합의통일을 전제로, <로드맵 ①>: 연합제 → 통일, <로드맵 ②>: 연방제 → 통일, <로드맵 ③>: 연합제 → 연방제 → 통일 과정으로 구분 가능하다. 통일 로드맵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급변사태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앞의 세 방향으로 통일과정의 진행을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서 제시되었다.

가. 통일유형

통일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요인, 통일유형 등에 대한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초 동서독 통합을 계기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김일성 사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주의권 체제붕괴 모델을 중심으로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를 예상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

적되었다.⁴⁸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한반도 통일 상황에 따른 위기 요인들의 관리 측면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통일 시나리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동서독식 흡수통일 모델을 상정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선차적 과제로 삼아 통일 문제는 유보되었다. 특히 북한은 비록 ‘실패한 체제’이지만, 당장 붕괴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며 높은 위기지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체제내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통일정책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존공영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실상의’ *de facto* 통일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법적·제도적’ *de jure* 통일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오래동안 유보되었다.

(1) 통일유형 및 실현가능성

통일유형의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다양한 연구 결과 통일의 유형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구체적 상황과 요인, 변수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기본 유형은 일단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유형 내에서 세분화하거나 또는 유형간 복합적인 구성이 가능해진다. 모든 통일 유형은 주체가 한국일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북한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시나리오는 배

⁴⁸ Eberstadt, *Foreign Affairs*; Snyder, *USIP Report, Rand Report*; 일본 방위청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1996.10); 박영호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2002).

제한다.

첫째, 가장 바람직한 유형인 합의형 통일을 꼽을 수 있다. 합의형은 유도형 및 붕괴형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당국자의 합의에 의한 통일 유형을 말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유형이다. 이는 북한체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고, 남북이 평화공존 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실상의 공동체를 형성한 뒤에 남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1:1 통일을 성취하는 형태다. 일단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규정하고 있는 단계를 거쳐 통일에 이르는 모습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둘째, 흡수형 통일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이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정권 또는 체제가 붕괴되어 사실상 남측에 의해 흡수통일로 귀결되는 형태이다. 붕괴의 원인과 형태,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합의형 또는 전쟁형 통일의 모습도 일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흡수형은 통일을 유도하거나, 붕괴에 따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흡수통일은 통일과정에서 시장경제평화에 기반한 경협과 개혁·개방을 통한 정권진화의 중·장기적 전망에 의한 통일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 할 유형은 붕괴형 통일로, 이는 국가 통제기능 상실에 따른 군·당·대중 간의 갈등, 권력공백(power vacuum) 상태에 따른 불가피한 개입에 의한 통일 유형이다.

셋째, 충돌형 통일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군사적 무력충돌이나 전쟁에 의한 통일유형으로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통일 유형은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대북 군사적 제재에 의한 전쟁 발발시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북한 지역을 점령한 뒤 통일에 이르는 유형으로 상정된다. 북한 지역 점령 후에도 군정

실시 후 지역 자치정부를 수립한 뒤에 합의 형식의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일 유형의 실현가능성 문제도 중요하다. 순수한 형태의 합의형 통일은 쌍방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통일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통합과정에서의 부작용과 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 측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사회체제의 민주화도 달성한다는 전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남북관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흡수형 통일이 추진될 경우에도 남북한 합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합의형은 통일방식과 절차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합의형 통일의 경우에도 상황 전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도 높지만, 불안정성이 높아 보다 치밀한 시나리오가 요구된다. 특히 흡수통일을 전제한 합의형은 외부 요인의 영향과 대북포용정책에 따른 북한의 내부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또는 대북 봉쇄에 따른 자력갱생 내지 위기 고조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권·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통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김정일 사망, 쿠데타 발생 등 돌발적인 사태 발생으로 인한 내부혼란, 체제붕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와 달리 전쟁형 통일은 통일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전쟁 대비계획 차원에서 준비할 사안이다. 최근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제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한적 공격에 따른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비화하거나,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통일 시나리오와 상관 변수

통일 시나리오를 상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요소는 크게 보아 ① 북한체제 변화 요인 ② 한국의 상황 ③ 국제정세 및 주변국 입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요인으로, 정치분야(김정일 리더십, 당·정·군 역할분담, 엘리트 결속력, 변화 적응), 군사분야(대내 영향력, 제2경제, 변화 저항), 외교분야(미·일관계, 국제사회 참여), 경제분야(체제유지 기능 상실, 경제회복), 사회분야(주민통제, 변동성 증대) 등이 있다. 둘째, 국내 요인으로, 대북정책 기조(포용/봉쇄), 통일추진 역량(대북/대내/대외), 통일 의지(지도층/일반국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국제요인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현상유지/영향력 확대), 미·중 세력균형(동북아전략)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물론 세부적인 통일 유형 및 시나리오에 따라 상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통일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통일 촉진요인은 북한 지도층과 주민의 의식 변화, 구조적 경제난 해결 난망,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 상실, 통일에 대한 열망 등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사회의 안보 불안 제거, 정서적·당위적 통일의식, 통일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인식하는 분위기 등은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의 안정 및 세력 균형 유지에 기여 등이 중요하다. 이와 달리 통일 저해요인은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지도층·주민 기득권 상실 우려, 대남 적개심 등 정서적 거부감, 당·군 보수파 저항 등이 통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의식, 냉전적 인식·문화, 통일 후휴증에 대한 국민 정서, 국내정치 상황 등이 통일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적 측면에서 세력불균형,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한 우려 등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통일의 영향 변수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 요인으로 지도자의 통일 의지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 즉, 진보·보수 세력의 통일 여론도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 통일부담 능력이 관건적인 사안으로 떠오른다. 둘째, 북한 요인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존속 여부, 북한 통치그룹의 통일 의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개혁·개방세력의 확대가능성과 함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북한 주민의 통일열망과 의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마지막 국제 요인으로 한·미동맹,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정책, 중국의 한반도전략 및 북한체제 지원 의지,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EU, ASEAN의 지지와 협력 등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변수들이다.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가지도자 그룹의 통일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통합의 능력이라 하겠다. 최고지도층의 시대정신의 포착과 함께 명분 있는 통일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통일을 위한 최고지도층의 리더십을 전제로 정치권의 결집과 국민적 의지를 묶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통일이 미래의 민족 사업이라는 비전 제시와 더불어, 통일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평화구축의 토대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의 통일 의지와 여건도 중요하다. 북한 스스로 자립을 향한 노력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복구에 전념할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정도 체제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판단할 시점에 북한의 개방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통일 의지가 높아질 수도 있다. 거꾸로 개혁·개방의 담보상

태로 성공적인 체제안정화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만성적 체제위기로 인한 붕괴로 남북한 연합제 또는 연방제 방식의 통합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한편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요인이 통일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관건적 사안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 없이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와 방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통일영향 요인인 국내, 북한 그리고 국제 요인 가운데 가장 주요한 변수는 무엇보다도 국내 지도층의 통일의지와 역사적 결단력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민적 통일열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며,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여건 조성의 문제가 과제로 제기된다.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남북한 연방제 또는 연합제 원리의 도입·적용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간 자치·분권의 이념이 구현되어야 한다.

나. 추진전략

(1) 급변사태 대응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통일 예측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붕괴란 무엇인가? 북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내구력을 전망하기 위해서 먼저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붕괴(collapse)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문 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회정치적 변화를

기술하는데 사용되어온 이 용어는 무엇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의 영역 또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용어라 하겠다.⁴⁹

붕괴 개념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집단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regime)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체제(system) 자체의 총체적 변혁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논의할 경우 먼저 변화의 다양한 수준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변화는 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권력엘리트, 정치·이념적 차원의 체제, 그리고 총체로서의 체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세 수준의 관계는 변화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계기적 발전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변화 전망은 정권교체(Regime change), 정권변환(Regime transformation), 리더십교체(Leader change) 그리고 정권진화(Regime evolution) 등을 살펴볼 수 있다. Type I: 박정희 유신체제, 마르코스 독재체제의 붕괴; Type II: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체제전환(Transition); Type III: 동독, 베트남의 해체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첫 단계 : 권력엘리트 교체 단계로, 이 수준의 변화 양상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변화로서 반드시 체제 속성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엘리트들은 선거나 지명과 같은 제도화된 방식 혹은 집단 간의 갈등을 통해서 교체될 수 있다. 변화의 수단이 어떤 것이든 간에 - 평화적 또는 물리력을 통한 강압적 방식이든 -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⁴⁹ 박영호, “북한 붕괴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안보국방관계 특별학술회의 『한반도 급변 사태시 과제와 대책』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총정지회 1997.11.14), pp. 9~19.

은 아니다. 중국의 지도자의 유고와 중국의 장래에 대해 전망한다면 개혁·개방정책을 둘러싼 분열과 혼선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가령, 어떠한 형태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권력엘리트의 교체 수준 이상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둘째 단계 : 체제변혁 단계로, 이는 권력엘리트의 교체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체제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양식에 있어 심대한 수정을 수반한다. 권력엘리트가 교체될 뿐만 아니라 체제의 구조가 변화한다. 대중동원과 집단적 폭력이 동반되는 고전적 의미의 혁명이 이 같은 변혁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그러나 체제변혁의 형태로 고전적 혁명만을 유일한 사례로 들 수는 없다. 1980대 초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휩쓴 민주화의 도미노현상을 비롯하여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대변혁은 체제변혁의 적합한 예들이다. 특히 1979년 한국의 유신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는 이에 정확히 부합되는 사례이다.

③ 셋째 단계 : 총체적 체제변혁으로, 이 단계는 가끔 발생하는 변화 형태로서 위의 두 단계의 변화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이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이 더 이상 공동체 유지를 위한 분업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혹은 보다 느슨한 사회체제가 다른 사회체제에 통합될 것을 동의할 경우나, 또는 무력으로 병합할 때 발생하게 된다. 총체적 체제변혁은 체제의 해체 혹은 통합을 통해 나타난다. 이 같은 변혁은 소연방의 해체(평화적), 동·서독통합(평화적), 베트남 통일(폭력적), 예멘통일(평화적-폭력적)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사회정치적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가 높은 수준의 변화로 계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점진적인 누적 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구조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내구력 또는 붕괴를 설명하는데 이 같은 논의를 적용해 보자. 첫 단계는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집단의 교체에 한정된다. 김정일의 기반이 김일성의 유산 위에 놓여있는 만큼 그들 집단의 축출이 매우 심각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은 분명하다. 둘째 단계는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고 주체사상에 의해 정당화되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즉,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변혁을 뜻한다. 이것은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변화의 폭과 내용은 매우 급격한 형태를 띠 것이다. 셋째 단계는 북한의 총체적 체제 변혁 즉,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한의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계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낮은 단계의 변화가 곧장 높은 수준의 변화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자신과 그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일정한 체제의 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나아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은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북한이라는 총체적 체제변혁, 북한사회의 해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특수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첫 단계의 변화가 높은 수준의 변화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체제 수준에서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의 축출과 그에 따른 체제의 변혁이 계기적으로 연결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붕괴 과정에 돌입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체제 내구력 즉, 지속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는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 문제로 “체제” 차원의 위기수준과 내구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통일연구원이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의 북한 사회의 5개 분야(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분야)에 대한 위기지수를 세분화된 지표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분석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지수 평가 및 내구력 전망』(1996)이라는 연구는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지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992년에 이미 체제위기의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위기 임계점 통과가 곧 체제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위기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체제 차원에서 불안정하다. 북한 “체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권력엘리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체제가 불안정한 이상 김정일이 외견상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김정일 집권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위 연구에 의하면 북한체제의 최대 약점은 국제적으로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국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미약하다는 점, 식량 및 원유 등 안보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체제의 강점은 연구 당시까지 관료기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당 간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의 응집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달리 말해, 북한 상층부의 공식적인 지시전달 메커니즘과 인적 요소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을 지

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친인척에 의한 권력독점, 치밀한 계급정책을 통한 사상성 검증, “당적 지도” 원칙의 고수를 통해 사람과 기구를 끊임없이 정비해 온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소년층에서 사회주의 문화가 많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연구결과의 최종적 결론은 북한 당국이 현재와 같은 위기수준 증가추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위기지수가 2001년~2008년 사이에 체제변혁 임계점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시기가 체제변혁의 예상연도였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변혁은 반드시 총체적 체제변혁 -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붕괴’ - 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 내에서 위에서 살펴본 둘째 단계 수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능력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어쨌든 체제변혁이 총체적 체제변혁 즉, 북한사회의 전면적 해체로 진행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위기상황이 수습되어 다시 안정적 국면에 진입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지금까지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북한 관측자들의 미래 예측을 항상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1997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은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돼 북한 정권이 5년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같은 믿음에 기반하여 1994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2003년까지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SA)가 비밀 해제한 문서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패널은 당시 북한의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으며,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돼 북한의 정치가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⁵⁰ 당시 클린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아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3년까지 권좌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1997년 초까지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경제적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전망은 여지없이 빗나갔으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과거 미국 정부의 판단착오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전(前) 국무부 자문관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내구력을 끊임없이 과소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최근 몇 년간 북한 경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인도적 지원 등에 힘입어 안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 붕괴로 권력을 잃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CIA 주도의 전문가팀 관계자들은 1997년 당시에는 북한의 주변국들이 지금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지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⁵¹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미래 전망과 관련한 북한체제의 내구력 문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김정일 리더십, 주체사상의 내면화 수준, 대민통제력 등의 변수를 지표화 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추세를 탈

⁵⁰ MORI DocID: 1085294,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Alternative North Korean Endgames: Result From a Discussion Panel on Continuing Coexist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telligence Report*, 21 January 1998.

⁵¹ “In '97, U.S. Panel Predicted a North Korea Collapse in 5 Years” Published October 27, 2006 <<http://www.nytimes.com/2006/10/27/world/asia/27intel.html>>.

북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밝힌 연구가 주목된다. 이 연구는 정치 분야에서 체제정당성을 검증하는 변수로 김정일 리더십, 조선노동당에 대한 지지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도를 지표화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급격히 저하되는 추세를 밝혔다. 정치적 통합성 부문, 그리고 주체사상의 침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당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크게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⁵²

특히 사회통제는 북한에서 정권, 체제 및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적 고립 상황에서도 정권유지와 체제지속성이 가능한 데에는 물리적 강제 수단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사회통제력의 유지는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주민통제의 수준은 1990년대 이후 대체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1년에 들어서도 통제 수준이 완화되는 경향 속에서도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이처럼 대개의 연구결과는 김정일의 리더십, 주체사상, 대민통제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내구력 지표가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북한의 체제붕괴 조짐이나 사회균열의 파국적 현상이 본격적으로 분출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편 필자가 다양한 신분 출신의 탈북자들의 면담을 통해 접근한 북한 체제 내구력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일깨워준다. 즉, 김정일의 리더십, 주체

⁵² 박영호·조민 외, 『통일예측모형 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체제 변화 추세 분석』 (통일연구원, 2003), pp. 104~109.

⁵³ 위의 책, pp. 119~124.

사상의 내면화 수준, 그리고 대민통제력은 분명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은 통치계층인 엘리트층과 중간층 그리고 하층 주민들 할 것 없이 모두 붕괴로 인한 개개인의 미래불확실성이 붕괴 자체를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객관적 지표와는 달리, 체제붕괴는 개개인의 주관적 이해관계에 따른 득실 측면에서의 손익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붕괴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차라리 지금까지 그럭저럭 적응해왔던 현재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북한의 체제붕괴 후 북한사회의 안정의 회복 못지않게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각각의 반응이 이후 북한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선 누구보다 먼저 간부층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자본주의가 들어온다면 …, 남한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지금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 나와 우리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현 상태의 유지를 바라고 결속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부잣집 머슴으로 사느니 경제적으로 궁핍하나마 이 상태가 낫다는 생각일 수 있으며, 특히 남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치계층의 엘리트층 내부에서 붕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은 어느 계층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중간 계층의 입장은 다르다. “무너진다고 해서 나까지야 당하겠는가 …” 하는 기대 속에서, 세상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무너져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변화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체제붕괴에도 불구하고 미래 보장에 대한 낙관적 확신이 광범하게 퍼져나간다면 실제로 붕괴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붕괴가 회피되어온 데에는 북한 통치층이 체제변화로 인한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출구(Exit)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금융제재를 비롯한 경제제재는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고갈시켜 간부층의 충성심 결집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정권 차원의 물질적 특혜에 익숙한 간부층의 부패를 한층 강화시켜 중간 이하 계층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의 속성상 근본적으로 개혁·개방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어렵다. 경제적 개방은 반드시 그에 비례하는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와 부딪힌다. 동유럽 자유화 물결과 중국의 개방과정에서 맞이한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는 북한에게 큰 학습 효과가 되었다. 북·미 관계정상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포기, 국제사회의 협력 등 북한 체제에 완벽한 우호적 분위기가 마련된다고 해도 개혁·개방의 결단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기존 노선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을 허용할 경우 인민들 사이에서 결코 김정일 수령체제의 신화가 유지될 수는 없으며 폭압적 정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외부 정보의 유입과 더불어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당연히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요구 수준과의 불균형으로 김정일 정권은 항상적인 위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체제 모순 속에서 개혁·개방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 유고(有故) 상황은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심각한 사태를 낳을 수 있다. 군부와 당을 중심으로 체제관리에 핵심적인 이해집단 중심의 집단지도체제의 부상을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일 통치시기에 들어와 당 정치국이나 내각 차원에서 최고통치자를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회의시스템’마저 없어졌다. 북한은 미래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으며, 김정일의 중국, 러시아로의 장기간의 외유 상황 시에도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통치대행이 없다. 김정일의 지방시찰 등의 경우 정부의 정상적인 작동은 정지된 상태며, 모스크바와 중국 방문은 핵심 간부들조차 모르는 사실이다. 불경스럽게 어느 누구도 김정일 없는 상황을 상정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위기 상황은 오히려 민족공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와 준비에 따라 북한의 붕괴는 남한 주도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국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붕괴는 자칫 민족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지도 모른다.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투 트랙(two track)의 동시추진이라 하겠다. 하나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에 대응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하나는 전쟁가능성을 회피하고 민족공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간 ‘평화와 협력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다.

한반도 단일 경제체제 추진 즉,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평화적 이행을 통한 실질적 *de facto* 통일 단계를 구축하거나, 평화적이고 민주적 이행을 통한 법적·제도적 *de jure* 통일을 달성하거나 간에 우리는 국가전략체계 속에 통일을 실천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남북한 통합의 방향은 시장경제의 이념 위에서 사적 소유권과 공동체(not commune, but community)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편, 남북한 산업의 상호보완적, 전략적 분업 - 북한의 지하자원, 미개발 토지,

양질의 노동력 등과 남한의 자본 기술 마케팅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시장경제의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실패한 중앙계획경제로부터 낮은 단계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수령독재체제로부터 권위주의적 집단지도체제로의 민주화 이행을 신중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권 통치층의 퇴로를 터줘야 한다. 이는 소련의 해체과정의 경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의 3대 구성으로 최하층은 아직 외부세계와 그들이 처한 객관적 처지에 대한 미몽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과 달리 중간계층은 남한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집권통치층은 대개 남한을 경계하면서 친중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인권 유린 문제를 제외하고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 통치층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대북정책이 기대된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민주화 논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통일을 향한 첫 단계로 북한 민주화 단계를 설정한다. 민주화는 북한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 즉, 김정일 수령독재체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주적인 개혁과 개방을 실현하는 단계다. 즉, 북한의 민주화 실현이 통일을 향한 선결조건의 해결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단순한 감정적 발상의 산물에 그칠 수 있다. 폭압적 북한체제가 김정일 수령체제에 기인한다는 주장과, 이 체제의 타파 없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당위적 논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일 체제 붕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평화적인 체제전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의 제시가 요망된다. 민주화와 자유화의 관계를 보면, 자유화는 법에 의한 인신구속, 집회결사의 자유, 최소한의 언론 자유 등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기구와 권력구조 대한 아래로부터의 국민적 통제, 시민사회의 자율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기회균등의 보장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김정일 수령체제의 제거는 민주화 과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북한 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독재체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북한 민주화전략은 단계적·점진적 민주화 과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적 자립 수준에 상응하는 인권 보장과 사회적·정치적 민주화의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수령독재체제로부터 사회주의적 원형인 중국식 모델인 당 독재로, 선군정치로부터 김정일 당총비서 체제 중심의 책임 있는 국가지도체제 구축을 향한 단계적·점진적 과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의 미래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 전망의 제시와 관련된 문제로, 북한 스스로 전망 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측의 합리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북한 스스로에 의한 미래에 대한 발전 개념이나, 미래청사진의 기대는 무망하다. 북한 민주화의 전제로 북한개발프로젝트 확정 및 제시가 기대된다. 그와 함께 개발이익의 북한주민 우선 원칙선언 등의 입장 천명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주민의 대량 남하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이며, 다른 한편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차별적 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민주화론은 북한 억압체제에 대한 폭로·고발 차원을 넘어 평화적인 통일전략적 차원에서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2) 남북연합 형성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통일원칙 및 통일방안의 점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가운데, 국가연합의 한 형태인 남북연합제 안이 주목되었다. 이는 독일이나 예멘, 베트남처럼 곧바로 완전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과정을 거치겠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보겠다. 단계적 과정은 실질적 측면은 남북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축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군사적·정치적 분야에서도 상호신뢰가 쌓이는 가운데 북한의 근본적인 대외관계가 풀려 주변 국제정세도 호전되고 여기에서 남북한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연합 구성을 추진할 수 있다. 물론 남북연합은 유럽연합(EU)에 비해 낮은 단계의 연합 형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연합의 의의는 주권국가간 궁극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단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분단국가의 통일 과정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의 제도라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역할 장치가 일단 마련된다면 통일은 사실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고, 통일과정에서 우려되는 물리적 충돌을 막아 평화통일을 가능케 한다. 그런즉 통일 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또한 이념이 서로 다른 남북한이 어떻게 국가연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고 회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연합 단계가 요청되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바로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느슨한 결합 형태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통일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남북연합 추진의 경우,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을 지향한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외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남한은 북한의 왕조체제를 인정한다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징하는 바를 근거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등을 물을 수 있다. 이를테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상황과 그리고 상대 체제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와 의사를 존중하는가를 따질 수 있다. 국가연합의 경우 공통의 이익과 최소한의 가치 공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공통성마저 없다면 남북연합은 가능하지 않다.

VI

결론

남북한 간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분단평화’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반도는 세계적 냉전체제 속에서 남북한 체제경쟁과 대결의식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분단시대의 평화즉, 분단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 20세기 말 사회주의체제의 해체 과정과 함께 전개된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북한은 점차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개혁·개방과 핵무기 보유의 두 갈래 길에서 마침내 핵보유 국가의 길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은 대미용이자 대남용이다. 북한의 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1990년대 초반 남북 간 회복불능 수준의 현격한 국력 차이에 대한 냉엄한 현실 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보장의 최후 보루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미국의 억제력과 밀고 당기는 각축 속에서 한반도 핵위기가 불거졌고, 북한은 드디어 핵보유 국가의 대열에 들어섰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뜻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 주도의 비확산체제에 기반한 국제적 핵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NPT 체제의 동요를 가져왔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로 동북아 안보지형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반도를 가름축으로 하여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치구도가 첨예해질 수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상황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보유로 국제 핵질서, 동북아 안보지형, 그리고 남북관계 세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는 불명료하며, 핵무기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회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핵무기로 김정일 수령체제의 정권안보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문제는 북한 김정일 체제의 정권안보의 요구와 병립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북한 수령체제 아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추진을 기대하기는 무척 어렵다. ‘실패한 국가’ 북한은 핵보유로 동북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위협적 실체로 떠오르게 되었다.

북한의 위기와 한계상황은 대미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체제 자체의 고유한 모순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체제 변화를 통한 정상국가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모색할 수 없다. 북한 주민의 경제난과 기아 상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룰을 준수하는 한편, 민주주의적 이념과 인권 문제를 비롯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려는 실천적인 노력과 입장의 전환이 절실하다.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변화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밖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은 무익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고통과 불투명한 미래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세계사는 더 이상 한민족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국제관계의 역학구도는 아직 미국의 대중(對中) 우위가 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의 길에 잠시라도 멈춰 서서는 안 된

다. 우리는 60년 가까이 호혜적 동맹관계를 맺어온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미·중 관계에서 미국 우위의 역학구도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은 5년~8년 정도에서 그칠 수 있다. 세계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중국은 오래지 않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상을 확보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립구도 형성 시기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민족의 통일을 향한 유효한 시간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국가의 등장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한민족의 통일은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영구한 평화를 창출하는 길이다. 분단상태에서의 평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분단상태 하에서 미국의 퇴조와 세계대국 중국의 부상, 한반도의 영구한 분단을 넘어, 한반도를 가르는 한강 이북 지역이 중화(中華)의 패권지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악몽의 시나리오가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체제에 대한 냉엄한 현실 인식이 요구된다. 북한 수령체제의 존재이유에 대한 비합리적 변호는 이제 자기파괴적이고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다. 비록 북한을 ‘떠안는 통일’이라도 통일은 평화의 조건이며, 통일한국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가교로서 비로소 세계평화와 두 문명의 균형추가 될 수 있다. 통일은 한민족의 미래를 여는 길이며,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박영호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2002.
- 박영호·조민 외. 『통일예측모형 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체제 변화 추세 분석』. 통일연구원, 2003.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4.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해남, 2004.
-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1996.
-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새로운 분석』. 통일연구원, 2001.
- 서진영.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통일연구원, 1989.
- 어윈 스틸처 편저, 황진하 역. 『미국의 힘』. 네모북스, 2005.
- 예쓰청,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21세기북스, 2005.
-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과정과의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2005.
- 존 L. 개디스, 강규형 역.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전략 - 미국의 안보 경험과 그 대응』. 나남출판, 2004.
-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김정일시대를 빛내일 리상국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社會主義事業新局面: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개창하자』. 人民出版社, 2002. 11.
- 황룡국 외. 『조선족혁명투쟁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98.

- Andrain, Charles F. *Political Change in the Third World*. Boston: Unwin Hyman, 1988.
- Mead, Walter Russell. *Special Providence*. A Century Foundation Book: Alfred A. Knopf New York, 2002.
- Wallestein, Immanuel. *Dependence in an Interdependent World: The Limited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with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N.Y. Cambridge Univ. Press, 1979.
- Wang, Yuan-Kang. *China's Grand Strategy And U.S. Primacy: Is China Balancing American Power*. The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July 2006.

2. 논 문

- 김소중. “중국 민족주의 역사와 전망.”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3.
- 박영호. “북한 붕괴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안보국방관계 특별학술회의 『한반도 급변사태시 과제와 대책』.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총칭지회, 1997.11.
- 박창권·김명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북한.” 『국방정책연구』. 2006 봄호. 국방연구원, 2006.
- 박형중.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 - 북한을 위한 모델?” 통일문제연구협의회. 『평화를 위한 우리의 한반도 정책 대구상』. 통일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05.7.
- 송건호.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 오익환. “반민특위 활동과 와해.”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 임종국. “일제하 친일군상의 실태.”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 조 민. “북한 미사일 사태와 한반도 평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년 가을.
- _____.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 Bijin, Zheng. ““Peacefully Rising”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Sep/Oct 2005.
- Haass, Richard N. “Regime Change and Its Limits.”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5.
- Jisi, Wang. “Searching for Stability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Sep/Oct 2005.
- Johnson, Charmers.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rmers Johnson (eds).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Kristol, William and Robert Kagan. “National Interest and Global Responsibility.” *Introduction to Present Dangers: Crisis and Opportunity in American Foreign and Defense*.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 Rice, Condoleezza.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Walter Wriston Lecture for the Manhattan Institute, October 1, 2002.

3. 기 타

- 『로동신문』.
- 『연합뉴스』.
- 『일스트리트 저널』.
- 『중앙방송』.

『평양방송』.

『新華通信』.

Rand Report.

Intelligence Report 21.

USIP Report.

『일본 방위청 보고서』.

콘돌리자 라이스, 헤리티지 재단 연설 2006.10.25.

中國軍力報告: 第二章 解讀中國戰略. 2005. 7. 21.

<<http://news.beelink.com.cn/20050721/1890427.shtml>>.

Gause, Ken E. *North Korean Civil-Military Trends: Military First Politics To A Point.* September 2006.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df/PUB728.pdf>>.

“In '97, U.S. Panel Predicted a North Korea Collapse in 5 Years”

Published: October 27, 2006. <<http://www.nytimes.com/2006/10/27/world/asia/27intel.html>>.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률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근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소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보혁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